

표지와 같은 도비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날짜 확인해주세요!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보안·테러·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6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의 김포공항 테러사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KAL기 폭탄테러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제스포츠 대회사건을 볼 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공작과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ISIL 테러단체의 위협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외국의 응원단·빈곤국의 불법적인 출신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무단이탈과 도주가능성을 우려했을 때 불법노동자 및 국내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보안·정보보안·시설보안·인적보안·산업보안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하며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안보, 안전, 재난, 산업보안, 테러, 경찰, 경호 등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현 실정에 맞춘 새롭고 다채로운 융합적인 보안의 형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5호의 발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이어나가며, 투고해주신 모든 연구자분들,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백산출판사,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강 옥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 례

-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전수일 7
-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정지덕 33
-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이삼기 · 김건희 59
-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박찬수 · 권혁빈 85

Contents

- Trend Analysis on Islamic Terrorist Organization
Jeon, Su Il 7
-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Training and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 in Korea
Jung, Ji Deok 33
-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h Transportation
Case in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rea
Lee, Sam Ki · Kim, Kun Hee 59
-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 and its response
plan
Park. Chan Soo · Kwon, Hyuck Bin 85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전 수 일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전 수 일*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었던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테러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ISIL에 대해 태동 배경, 주요인물, 조직 규모와 연계세력, 주요 테러사건 및 알카에다·탈레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ISIL 등장(2014.6월) 이후 이들이 직접 자행하거나 연계·추종세력에 의해 일어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2015), 김군 ISIL 가담사건(2015), 벨기에 브뤼셀공항 자살폭탄 테러(2016),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2016)의 사건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들을 제시함으로써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행 테러방지법의 발전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한국 실정에 알맞은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며, 향후 한국에서의 테러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률, 대응체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슬람, 테러, 대테러, 테러조직, ISIL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목 차
I. 서 론
II.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
III. 주요 테러 사건
IV.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과 특징
V. 결 론

I. 서 론

최근 장소와 수단·규모에 관계없이 새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이슬람 테러조직은 최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의 등장으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법론적 폭력성과 이념적 극단성이 결합된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의 전형인 ISIL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테러집단이 아니며 중세적 신정주의에 근거한 국가 정체성을 현실점에서 구현하려는 시대착오적 폭력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ISIL·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조직들은 첨단화된 테러수법에 지역별·국가별 테러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초국가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보 및 첨단 컴퓨터 기술의 활용으로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방법론적 폭력성과 이념적 극단성이 결합된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의 전형인 ISIL에 의한 테러리즘은 조직화·국제화·대형화·하이테크화 및 무차별성·동시다발적 공격의 양상을 보이고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자살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테러의 양대 세력은 알카에다와 ISIL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시리아를 거점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ISIL 테러조직은 이름만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일 뿐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테러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ISIL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초한 순수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이슬람국가도 전복대상으로 삼았고 이에 동조하는 모든 서방권 국가를 테러대상으로 삼고 공격하거나 위협을 하였다(강영숙, 2014).

ISIL이 한국을 ‘십자군 동맹국’·‘악마의 연합군’에 포함시켜 우리국민을 살해하려고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으로 100여 개국 200만 명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인터넷상 사제폭발물 제조법 유포, 빈부격차·인종차별 등에 따른 사회 불만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테러를 모방한 폭발물 사건(2001년 이후 19건)과 공항·지하철역 등에 대한 테러협박(연 50여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인·무슬림 2세 등 인적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단체 연계 인물과 과격사상 전파·자금 모집 동향이 포착되고 해외 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수시 발생하는 등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ISIL 등 국제테러조직과 이들과 연계한 국내 자생적 테러위협을 사전 차단하고 테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2016.3.3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동년 5.31부로 시행령을 제정하여 테러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대응체계를 단순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대응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기획·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테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각 대테러기관들은 테러 유형별로 예방 및 현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현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및 대테러기관의 권한 남용 등의 이유를 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테러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의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전 예방적인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정보수집과 공유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점의 인식하에, 본 연구는 먼저 테러와 뉴테러리즘 및 테러의 유형, 최근 전 세계에서 대규모·폭력적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ISIL·알카에다 등 ISIL과 관련된 주요 테러사건을 분석·평가하여 ISIL 테러리즘의 성향과 특징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ISIL이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유형과 대응방안, 테러관련 법률의 정비·보완,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테러정보 공유·관리 활성화 측면에서 대테러 정책을 제시하였다.

II.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

1. UN 및 각국 지정 테러단체

국제연합(UN)은 173 기준 ISIL, 알카에다 등 총 81개를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하여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도 UN 지정 테러단체와 자국 테러단체 지정근거에 의해 총 92개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다.

1) 테러활동 중인 단체(35개)

<표 1> 테러활동 중인 단체 현황

구분	국가	단체명
ISIL/ 알카에다 연계 (33개)	레바논(2)	아스밋 알 안사르, 압달라 아잠 여단
	리비아(3)	리비아 이슬람 전투그룹, 안사르 알 샤리아(테르나), 안사르 알 샤리아(벵가지)
	시리아(3)	알 누스라 전선, 하라카트 샴 알 이슬람, 제이쉬 알무하지룬 왈안사르(JMA)
	예멘	예멘 알카에다
	알제리(2)	알카에다 마그렙지부, 준드 알 칼리파
	이라크(2)	안사르 알 이슬람, ISIL
	말리(2)	안사르 알 딘, 무라비툼
	튀니지	안사르 알 샤리아
	나이지리아(2)	보코하람, 안사를 무슬리미나 피 빌라디스 수단
	중국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파키스탄(7)	라쉬카르 에 장비, 라쉬카르 에 타이바, 이슬람 지하드그룹, 제이쉬 에

구분	국가	단체명
		모하메드,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하라카툼 지하드 이슬라미, 하라카툼 무자헤딘
	아프가니스탄	우즈벡 이슬람 운동
	러시아	카프카즈 에미레이트
	필리핀	아부 사야프 그룹
	인도네시아(3)	제마 안사루트 타우히드, 제마 이슬라미야, 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
탈레반 연계	아프가니 스탄	하카니 네트워크
소말리아 사태	소말리아	알샤바브

※ 자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해설, 2017.

2) 테러활동 약화단체(15개)

<표 2> 테러활동 약화단체 현황

구분	국가	단체명
	러시아(3)	이슬람 국제여단, 체첸 리아두스 살리킨 경찰과 사보타주 대대 특수목적 이슬람연대
	리비아	무하마드 자말 네트워크
	말리(3)	알 무아카운 비담, 알 물라타문, 서아프리카 유일신과 성전
	모로코	모로코 이슬람 전투 그룹
	소말리아	알 이티하드 알 이슬라미야
	아프가니스탄	마크타브 알 키다마트
ISIL/ 알카에다 연계 (15개)	알제리	이슬람 무장그룹
	예멘	아덴 이슬람 군
	이집트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
	튀니지	튀니지 전투 그룹
	필리핀	라자 솔라이만 운동

※ 자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해설, 2017.

3) 테러자금 지원 단체(31개)

<표 3> 테러자금 지원단체 현황

구분	국가	단체명
ISIL/ 알카에다 연계	네덜란드	알 하르마인 네덜란드
	미국(2)	베네볼렌스 국제 재단, 국제 구호 재단
	방글라데시	알 하르마인 방글라데시

구분	국가	단체명
(27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4)	알 푸르칸, 알 하르마인&알 마스지드 알 아크사 자선 재단, 알 하르마인 이슬람 재단, 타이바 인터내셔널 보스니아 사무소
	소말리아	알 하르마인 이슬람 재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3)	알 하르마인 아프가니스탄 자마툼 알 이슬미야, 와파 인도주의 조직
	알바니아	알 하르마인 알바니아
	알제리	자마트 후마트 다와 살라피야
	인도네시아(2)	알 하르마인 재단, 힐랄 아흐마르 소사이여티
	케냐/에티오피아	알 하르마인 에티오피아, 알 하르마인 재단 케냐
	파키스탄(7)	아프간 지원위원회, 알 아크타르 국제신탁, 알 하르마인 재단 파키스탄, 알 라시드 신탁, 라비타 신탁, 이슬람 부흥 소사이여티, 움마 타미르 에 나우
	코모로	알 하르마인 재단 코모로
	탄자니아	알 하르마인 재단 탄자니아
	탈레반	라하트 유한회사
	연계 (4개)	파키스탄(3) 하지 바쉬르 자르지밀 컴파니 하왈라, 하지카이톨라 하지 사타르 머니 익스체인지, 로산 머니 익스체인지

※ 자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해설, 2017.

2. ISIL(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

1) 태동 배경

ISIL은 '90년대末 '알 자르카위(Al Zarqawi)'가 결성한 '유일신과 성전(Al Tawhid al Jihad)'이 모체이며, '03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 몰락이후 군·경 출신자를 규합하여 테러단체를 결성하였는데, 명칭은 '이라크 알카에다(AQI, '04.4) → '이라크 이슬람국가(ISI, '06.10) →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13.4) → '이슬람국가(IS, '14.6)로 변경되었다.

ISIL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 테러조직으로 주요 구성원은 이슬람 수니(Sunni)파 계열 아랍인들이며 현재는 이라크·시리아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ISIL은 500년 전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사실상 소멸한 아랍인 중심의 칼리프 국가의 부활과 궁극적으로는 이슬람에 의한 세계정복을 꿈꾸는 극단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ISIL은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이슬람 신정국가(칼리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16.11 기준, 이라크·시리아 영토 약 10%(6만 5천km²)를 장악하고 있으며, 모술·라카를 중심으로 공방전을 펼치는 한편 후방 주요도시에서 폭탄테러를 빈번

자행 중에 있다(인남식, 2015).

국제사회가 그동안 사용해 온 ISIL(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 국가)은 영어로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인데 ISIS는 영어 Levant(시리아·요르단 등 지중해 동쪽지역 지칭)를 아랍어 'Sham'으로 바꾼 용어이다. ISIL이 '14.6 전 세계 칼리프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IS로 명칭을 변경하자 '오바마' 정부는 지역 테러단체로 격하시키기 위해 ISIL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17.2.25 시리아 사태 해결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등 쏘 행정부처에 ISIL 대신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지역 테러단체로 격하시키는 의미와 함께 그 상징성을 전 세계 칼리프국가 수립 → 레반트지역 → 시리아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으면서 시리아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 4> ISIL의 명칭 변경 역사

연도	조직명	지도자
'99~'04	'유일신과 지하드'(Group of Divine Oneness Jihad) -2004년 아국인 김선일씨 참수	알 자르카위
'04.10~'06.1	'이라크 알 카에다'(AQI, Iraq Al-Q)	"
'06.1~'06.10	'이라크 무자히딘 슈라위원회' (The Mujahideen Shura Council Iraq)	알 마스리, 알 무하지르
'06.10~'13.3	'이라크이슬람국가'(ISI, Islamic State of Iraq) -'11년 시리아 내전 발생, '알 누스라 전선' 구축	"
'13.3~'14.6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in Iraq and Levant) -'13.3 ISIL로 변경, 알카에다와 결별	알 바그다디
'14.6.29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건설 -이슬람국가 선포, 알 바그다디가 칼리파로 등극	"
'17.2.25	트럼프 정부가 ISIL을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로 사용토록 지시	"

2) ISIL 성장의 주요 요인

현재 '알 바그다디'가 지도자로 있는 ISIL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 시아파 정권이 주로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던 후세인 정권 시기의 군인, 경찰, 일반 공무원,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시리아에서도 시아파 정권인 '알 아사드' 정권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지나친 폭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ISIL은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혼란 및 국민통합 실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한 후인 2014년 6월 29일 칼리파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인 자칭 ISIL이라고 하는 국가 수립을 선포하였다.

둘째, ISIL은 자신들이 싸우는 명분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ISIL이 출판하는 홍보매체 ‘다빅’(DABIQ) 제 4호의 표지에는 로마의 성 베드로성당 사진과 높은 기둥 위에서 마치 승자의 깃발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ISIL의 깃발 사진을 합성하여 게재하고 ‘실패한 십자군’이라는 표제어를 달았는데 이는 기독교의 중심지인 성 베드로 성당을 상징 조작하여 기독교권과 이슬람권 간의 종말론적 전쟁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셋째, ISIL이 급격히 확대된 또 다른 이유는 ISIL이 인터넷과 SNS, 동영상 촬영 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SIL은 매우 고도화된 현대적 첨단기기를 잘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로운 늑대들’을 포섭하고, ISIL 최고 지도자에 충성맹세를 하게하여, 이들을 전사로 만들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파리 테러에서와 같이 ‘외로운 늑대들’을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ISIL은 온라인상 홍보·선전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어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육체를 컴퓨터 스크린 뒤에 숨겨 놓고서 네트워크상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젊은이들’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여 그들에게 폭력 사용을 허용했다.

다섯째, ISIL이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의 국민통합 실패, 현대적 첨단기기를 활용한 홍보, 사이버상의 폭력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이는 명분을 제시,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대제국 건설이라는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무슬림들에게 서구 식민통치에 대한 울분과 복수심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자국 정부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정상율, 2016).

3) 주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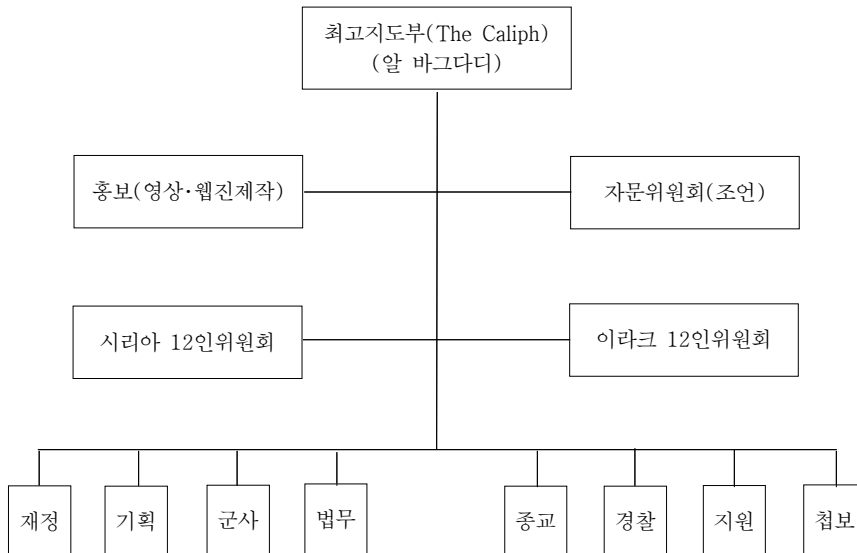
현재 ISIL의 최고지도자는 ‘알 바그다디(Al Baghdadi)’로 1971.7.28 이라크 사마라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바그다드 이슬람대학교 졸업 후 종교학교 교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1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대미 무장활동을 전개하다 105~109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105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미군 및 이라크군과 교전 중 AQI 지도자 ‘알 마스라’가 사망하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았고, 146 ‘알 바그다다’를 칼리프로 하는 이슬람국가(IS)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을 ‘무함마드’의 손자 ‘하싼’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칼리프 이브라힘’으로 지칭하고 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UN이 11.10 ‘알 바그다다’를 국제테러분자로 지정하였고, 미 국무부는 현상금 1천만 달러를 내걸고 수배 중에 있다.

4) 조직규모 및 연계세력

ISIL 조직은 과거 초대 칼리프 시대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1971년생 ‘알 바그다디(Al-Baghdadi)’ 1인 지도체제로 스스로를 칼리프(이슬람 공동체의 통치권자)로 자임하고 있다. 그 휘하에 샤리아(Sharia, 이슬람법 통치), 슈라(Shura, 조언·협의·입법기능), 군사 및 치안 등 4개 영역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름대로의 통치행위를 전개하고 있다(인남식, 2015). 인터넷상 SNS를 통한 홍보부서를 최고지도자 직속으로 두고 있고 시리아와 이라크를 담당하는 12인 위원회와 8개(재정, 기획, 군사, 법무, 종교, 경찰, 지원, 첩보)의 부서를 두고 있다.



[그림 1] ISIL 조직구조

※ 자료: 인남식, 폭력적 극단주의 ISIL의 발호 현황과 전망, 2017.

ISIL은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핵심거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16.8 기준 그 조직원을 약 15,000-30,000여명으로, 이들 중 외국인전투원(FTF)은 4만 여명, 서방국가 출신자는 약 7,9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5.8~'16.8간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 조직원 45,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IL과 연계된 세력은 '보코하람', '무자헤딘 슈라위원회', '우즈벡 이슬람운동', '알 마크디스'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4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5) 주요 동향

이라크 서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준국가적 군사역량을 갖춘 ISIL은 최근 연합군의 공습으로 이라크·시리아내 영토를 상당부분 잃고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드 선동 잡지 '다빅'·'루미야'·'알나바'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테러를 선동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5.9 유포한 '다빅' 1호에서는 반ISIL전에 참여중인 미국·영국·한국·EU 등 62개국을 십자군 동맹국이라 지칭하고 테러를 선동한 바 있다. '14.1월부터 대공세를 통해 이라크 안바르주 팔루자 지역과 6월에는 북부 니네와주 모술을 장악하였고 '14.2 시리아 '알누스라 전선' 합병문제로 '알카에다와 마찰을 빚으면서 '알카에다에서 탈퇴하였다. 현재는 이라크 서북부(모술 등)와 시리아 동부지역(라카 등)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정부군과 교전을 전개하면서 후방도시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주력군이 연합군과의 전쟁에 주력하면서 직접 테러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유럽·동남아시아 등지의 지역 테러단체와 연계하여 자생테러에 주력하고 있다. UN은 '04.10, 미국은 '04.12, 캐나다는 '12.8에 ISIL을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6) 주요 테러사건

국제적으로 가장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ISIL이 직접 자행하거나 연계·추종세력에 의해 발생한 주요 테러사건은 ①'04.6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한국인 근로자 '김선일'을 납치하여 살해, ②'11.5 '빈 라덴'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힐라'에서 자폭테러 자행, 경찰 96명 사상, ③'12.7 수도 바그다드 및 중남부 주요도시에서 시내 중심가, 경찰서 등 대상 동시다발 폭탄테러를 자행, 102명 사망·264명 부상, ④'13.9 바그다드 시아파 집거지역인 사드르市에서 추모객으로 봄비는 장례식장 겨냥 차량 자폭테러

를 자행, 72명 사망·120명 부상, ⑤'14.8 북부 니네와州 신자르市 장악, '야지디족' 학살로 대규모 난민사태 유발, ⑥'14.8~'15.1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에 반발, 인질로 잡고 있던 미국(3명)·영국(2명)·일본(2명)인 참수, 요르단 조종사 1명을 화형, ⑦'15.11 프랑스 파리 공연장·축구장·카페 등에 동시다발테러를 자행, 498명 사상, ⑧'16.3 벨기에 브뤼셀 공항·지하철역 동시다발테러를 자행, 372명 사상 등이다. 최근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테러를 하는 등 對서방권에 대한 테러위협을 확산시키고 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7) ISIL과 알카에다의 차이점

(1) 목표

두 단체 모두 진정한 이슬람 통치 확립을 지향하나, 알카에다가 부패한 아랍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반면 ISIL은 이슬람 세계 내 타종파와 변절자들을 타도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ISIL은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여타 반군, 이라크 시아파, 레바논 헤즈볼라 등 다른 무슬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2) 전술

알카에다는 이슬람 세계에서 미국을 축출한다는 목표아래 상징적 대상(미국 대사관, 세계무역센터 등)에 대한 대규모 테러공격을 선호하지만, ISIL은 시리아 내전 와중에 병력을 통한 영토 확장에 치중하면서 테러공격도 일단 광범위한 전쟁 수행의 일부로 사용한다. 이는 조직형태와도 연관이 있어 알카에다는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포조직들로 구성된 느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반면, ISIL은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통제하는 상명하복 식 관료주의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8) ISIL과 탈레반의 차이점

(1) 목표

두 단체 모두 진정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하여 무슬림이 지배하는 신정국가 건립을 지향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ISIL이 세계 1차 대전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확정된 중동지역의 인위적 국경분할을 타파하고 중동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통괄하는 이슬람 국가(칼리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현 '가니' 대통령과 정권을 축출하고 이슬람 통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ISIL은 미국 등 기독교권 서방국가는 물론이고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여타 반군, 이라크 시아파, 레바논 헤즈볼라 등 다른 무슬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탈레반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등 연합군이 침공하자 아프간 및 인근 파키스탄 접경지역 등으로 이동하여 미군 및 반정부 테러에 주력하고 있다.

(2) 전술

ISIL은 이라크 서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지역 등을 주요 거점으로 신정국가를 선포 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유전 및 군인·군장비 등의 확보를 통해 準국가적 조직을 갖추고 서방권과 전쟁을 하면서 직접 또는 각국의 지지·추종세력과 연계한 대규모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III. 주요 테러 사건

1.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2015.11.13 21:20-24:00 간 파리 일대에서 벨기에 출신 ISIL 간부 ‘아바우드’ 등 테러범 8명이 축구경기장 및 식당 등에서 일반 시민 대상 무차별 총기난사와 자폭·인질납치 등 동시다발 테러를 자행하여 130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중상 99명) 당한 대규모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9.11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의 테러사건이었다.

이들 테러범 8명은 3개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1팀은 프랑스·독일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열리는 파리 북부 생드니 국립축구경기장 인근에서 프랑스 출신 FTF ‘하드파’와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한 ISIL 조직원 2명이 액체폭탄인 TATP로 제조한 폭탄조끼를 착용하고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외곽에서 자폭테러를 실행하였고, 2팀은 파리 연쇄테러를 기획·총괄한 ISIL 간부 ‘아바우드’가 다른 테러범 2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파리 시내를 활보하며 식당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테러를 감행하였고, 3팀은 프랑스 출신 FTF ‘모스테파이’등 3명이 AK소총·수류탄·폭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채 미국 록밴드그룹의 공연

이 진행되고 있는 바타클랑 콘서트홀에 난입하여 관객들을 인질로 삼고 무차별 총격테러를 저질렀다. 인질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테러범들은 모두 폭탄조끼를 터트려 자폭하였다(연합뉴스, 2015).

이는 ISIL이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면서 유럽 등지에서의 자생테러를 선동하는 등 세력 확장에 주력 하던 중 유럽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파리의 다중운 집시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치밀하게 기획하여 현지 원정을 통해 실행한 무차별 동시다발 연쇄테러이다.

2. 한국 김 군의 ISIL 가담 사건

2015.1.8일 한국인 김 모군(이하 ‘김 군’으로 호칭)이 터키로 출국하였다가 1월 10일 시리아 킬리스 소재 메르투르 호텔에서 아침 식사 후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 경찰 수사결과, 김 군은 인터넷으로 수시 이슬람 과격 테러조직인 ISIL 관련 검색을 하였고 트위터를 사용하여 ISIL 조직원 ‘하싼’과 ISIL 합류 방안을 협의 후, 2015년 1월 8일 “하싼을 만나러 터키로 간다”며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후 관계당국에 의해 김 군이 ISIL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벨기에 브뤼셀공항 자살폭탄 테러

2016.3.22 08:00경 ISIL 조직원 ‘이브라힘 엘 바크라위’ 등 3명이 브뤼셀 자벤템 공항 내 ‘아메리칸 에어라인사’ 발권 데스크와 활주로 인근에서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사제폭발물을 폭발시켜 승객 등 15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약 1시간 후 09:10분경 EU·NATO 본부 인근 말빅역에서 ISIL 조직원 1명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사제폭발물을 터뜨려 17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연합뉴스, 2016).

공항 테러범 3명중 ‘이브라힘 엘 바크라위’ 등 2명은 자폭하였고 ‘아브리니’는 도주하다 4.8일에 체포되었다. 말빅 역 테러범은 ‘칼리드 엘 바크라위’로 공항테러범 ‘이브라힘 엘 바크라위’의 동생으로 자폭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4.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

2016.6.12 새벽 2시경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29세)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Pulse)’라는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테러범 자신을 포함, 최소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IV.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과 특징

1. 사건분석을 통한 테러 특징

1) SNS 등 활용 조직원 모집·테러 자행

ISIL은 SNS상의 트위터 또는 오픈소스 기반의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Surespot) 등을 활용하는데 이런 방법은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매우 보안성이 뛰어나다.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를 주도한 수니파 ISIL은 테러공격 모의와 대원모집에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 보다 더 안전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PS4)’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한국일보, 2015).

서방권 정보 당국은 ISIL이 최근 텔레그램과 플레이스테이션4(PS4) 등 속도가 빠르고 보안이 잘되는 프로그램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산하 대테러센터의 ‘아론 브랜틀라’ 테러 분석가는 “ISIL은 이미 정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들은 대면(對面) 통신 시대의 속도를 넘어 사이버 시대의 속도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5).

2) 자생적 테러 선동을 통한 전세계 테러확산 기도

ISIL은 직접 테러를 자행하거나 현지 ‘외로운 늑대’ 등을 이용한 자생테러의 양대 전략을 구사하며 전 세계에 대한 공격력을 키워왔다. ‘할린 감비르 전쟁연구소(ISW)’는 ISIL이 ①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공격으로 역내 갈등 촉발, ②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현지 지하디스트 단체와의 관계 수립, ③서방에서 공격을 수행

할 ISIL 동조자에 대한 사기 고취와 지원 등 3가지 병행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연합뉴스, 2015).

최근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중 약 50% 정도는 ISIL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소위 ‘외로운 늑대형’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5.12 미국 샌버나디노 테러, 2016.6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테러, 2016.7 이스라엘 텔아비브 쇼핑단지 테러, 2016.7 프랑스 니스 차량돌진 테러 등이 발생하였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상기 테러들이 외면적으로는 ISIL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테러의 동기가 ISIL의 지속적인 인터넷을 통한 선전·선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ISIL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공격 증가

2016.4월 ISIL 대변인 ‘아브 모하메드’가 “미국·프랑스와 동맹국들의 국민들을 처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ISIL 지도부가 테러 대상지역을 유럽·미국 등을 지정함으로써 15~16년간 대형테러가 프랑스 3건, 독일 3건, 미국 3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라크·시리아에서 활동타 자국으로 귀환한 외국인테러전투원(FITF) 3만~3만 8천여 명을 활용하고 약 5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최근 터키가 자국 내 ISIL 지지 세력을 검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ISIL 지도부는 경고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테러에 집중하도록 지시하여 터키 내 테러가 대폭 증가(15년 2건 → 16년 7건) 하였다. 또한,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는 ISIL이 직접 게릴라전 및 테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SIL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4) 지역 테러단체 및 새로운 테러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기존 ISIL 연계 테러단체인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필리핀 아부사야프 그룹 등 테러단체와의 연계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코하람은 2015.3 ISIL에 충성맹세를 한 바 있고, 아부사야프도 2015년 ISIL에 가입한 후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SIL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회교권 내 ISIL 추종세력들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도 우려된다(미국 태평양 사령관 Harris, 2016). 지역 내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필리핀 100여명, 말레이시아 100여

명, 인도네시아 700여명, 중국이 3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oufan Group 보안회사, 2016).

5) 참수·폭력 동영상 공개를 통한 공포심 조성

지금까지 ISIL이 공개한 인질 참수 등 잔혹하고 폭력적인 동영상 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①2014.8.19 미국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플리’ 참수, ②2014.9.2 미국 프리랜서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 참수, ③2014.9.13 영국 구호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 참수, ④2014.10.3 영국 구호활동가 ‘앨런 헤닝’ 참수, ⑤2014.11.16 미국 구호활동가 ‘피터 케이시크’ 참수, ⑥2015.1.24 일본 민간 군사회사 대표 ‘유카와 하루나’ 참수, ⑦2015.2.1 일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자’ 참수, ⑧2015.2.3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시리아 거주 남성을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린 후 돌로 쳐 살해, ⑨2015.2.3 요르단 조종사 마르 알카삭스빠를 산채로 화형 등 3가지 병행전략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대테러전 참여 및 지원활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6) ISIL의 테러 수단

우크라이나와 발칸반도에서 밀반입하는 자동화기와 백색분말형태의 사제폭발물인 TATP 등 전통적인 수단이 테러에 당분간 계속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대형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ISIL이 자체 생산 가능하고 시리아에서 사용한 바 있는 겨자가스 등 생화학무기를 유럽 등지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SIL은 이라크에서 생화학무기 운영 경험 요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저장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ISIL이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주변에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에 폭발물을 탑재하여 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테러를 빈번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비용 재테크의 전형적인 테러 수법이다(Europol 홈페이지, 2017.3.15. 검색).

영국과 미국·프랑스 정부의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ISIL이 생화학 테러나 핵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파리 연쇄테러범들의 근거지인 아파트 등에서 화학무기 제조물질을 발견하였고 러시아 폭력조직은 중동지역에 방사능 물질을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조선닷컴, 2015).

7) ISIL의 테러법 및 테러 수법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무슬림들이 아니며 난민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잠재적인 테러범 후보군이다. 이들은 테러를 통해 ‘무의미한 존재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ISIL 테러에 가담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대 후반 청소년들과 20~30대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SIL은 그간 여러 개의 타깃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복합·연쇄테러를 선호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리아·이라크에서 사용하는 극렬한 테러수법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중 폭탄 적재차량을 이용한 대형테러와 주요 인사·시민을 인질로 납치한 수법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16.7 ISIL과 알카에다는 “서방인을 납치해 수감 중인 전사들과 교환”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ISIL은 최근 들어 주변에서 쉽게 획득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칼, 차량 및 액체폭탄 등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 수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쉽고 획득·제조에 적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8) ISIL의 테러 타깃

그간 ISIL 소속 전사 및 연계·추종세력인 ‘외로운 늑대’들은 주로 벨기에 여자경찰 대상 테러(16.8) 및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경계 군인 대상 테러(17.2) 등 군·경 및 관공서·군부대 등 하드 타깃을 공격했으나, 최근 들어 공연장·경기장·교통시설·대형 쇼핑몰 등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관람객 등 불특정 다수를 대규모 살상하는 소프트 타깃을 주로 선호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 충격 및 외국인 투자 기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테러타깃을 정하는데 중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파리·니스테러 이후 관광수입 9,5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유로폴, 2017).

9)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활용

풍부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SNS를 통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을 모집하여 서방권과의 전쟁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테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이슬람 테러조직 ISIL의 특징

1) 조직화된 시스템을 갖춘 테러조직

ISIL은 과거 테러조직과 달리 사람(Men)·돈(Money)·군수품(Munitions)의 3M을 모두 갖추고 있는 테러조직이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단순한 테러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평화 위협과 반인륜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약탈경제를 기반으로 이라크 영토의 30%, 시리아 영토의 35% 정도를 장악한 이들은 주요도시는 물론 유전, 도로를 직접 점령하였고 기존 관료주의적 행정체계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ISIL이 보유한 시리아 유전 50곳과 이라크 유전 20곳에서 얻은 재정을 바탕으로 다른 반군조직 보다 5배 이상의 높은 급여를 주면서 외국 용병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ISIL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강영숙, 2014).

2) 다양한 수입원

쿠웨이트 등 수니파 지역 거부들이 ISIL에 재정을 기부하고 있으며 점령지역에서 조세징수, 무기밀매, 강도, 인질납치 몸값, 원유판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 5억 달러(약 5,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농가를 상대로 정기적인 조공을 받고 기독교 등 현지 소수종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료와 통행세, 보호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대유물들도 밀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내 8개 가스화 50곳의 유전, 이라크 내 20곳의 등에서 뽑은 원유를 이라크 북부 정유시설에서 정제한 석유를 팔아 하루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시사벌티매거진, 2014).

3) 군사력

ISIL은 이라크·시리아의 군사기지를 손에 넣으면서 정부군보다 더 많은 전투 장비를 보유했다. 자체 대원들이 M16 소총을 3세트씩이나 보유하고 있고 舊소련제 T-55 탱크 30대와 T-72 탱크 10여대, 미국산 험비·곡사포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연합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확보한 ISIL 대원의 노트북에서 페스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 제조법을 발견하는 등 작은 양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교육수준

미국 군사전문지인 ‘머린코타임스(MCT)’는 ISIL의 군사능력 5가지라는 분석기사에서 ISIL의 위협은 보유 장비가 아니라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상대로 한 선전 활동과 높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전사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는 선전전술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ISIL은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에서 교육받은 젊은 요원들을 보유한 것이 다른 조직과의 차이점인데, 똑똑한 요원들을 미디어 분야에 배치해 놓고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강영숙, 2014).

V. 결론

본 연구는 ISIL·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ISIL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해 발생한 주요 테러사건을 분석·평가하여 ISIL 테러리즘의 성향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2014년 6월 ‘칼리프 국가’의 설립을 선언하며 등장한 이후 국제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ISIL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 테러조직으로 현재는 이라크·시리아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 중에 있으나, 최근 연합군의 공습으로 이라크·시리아 내 영토를 상당 부분 잃고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이 일으킨 75.11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등 대형 테러사건에 대한 분석과 유력 대테러 연구기관 등이 평가한 ISIL 테러리즘의 특징을 종합 정리해보면,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다비드’ 등 선전·홍보매체와 SNS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테러전투원(FTF)·시리아 난민 및 각국의 잠재적 자생테러범을 모집하여 직·간접 테러를 일으키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들과 새로운 테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격·간접테러를 독려·지시하고 사제폭발물·차량·칼 등 저비용 재테크 테러 수단 및 화생방 무기 등을 활용하여 다중운집시설·관광지 축제장 등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복합 연쇄테러를

빈번 자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ISIL 등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자국 내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들과 연계된 세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소홀히 하여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점

둘째,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및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 전력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했던 점

셋째, 유럽연합국 간 국경개방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으로 테러위험인물 및 요주의 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넷째, 대부분 도심에서 연쇄 복합테러 형태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총격·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지 못해 연쇄테러를 차단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

다섯째, 대규모 공연장·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육안·촉수 소지품검색 등 최소한의 보안검색에도 소홀하였고 사건 직후 관람객 긴급 대피 등 사후 대응에도 미흡하였다는 점

여섯째,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허용되고 소규모 무기거래 암시장에서 불법 총기류 거래가 성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점

일곱째, ISIL 등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테러범을 모집하고 테러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통신정보 등의 수집이 개인의 인권침해와 직결되어 관련 법조항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

여덟째, ISIL 테러가 여러 개 장소 또는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에도 국가 간 테러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테러방지법에 의한 새로운 국가 대테러 시스템 조기 정착, 국제테러조직원·연계세력의 불순활동 차단 주력,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 시설과 테러이용 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재외국민·시설보호 및 국가 중요행사 안전 확보, 신종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징후 신속포착 및 테러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테러관련 신고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민·관 합동 테러예방협의체 운영 등의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숙 (2014).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IS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제 7권 제 4호.
- 국무총리실대테러센터 (2017). 테러방지법 해설.
- 권정훈 (2009). 한국의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일 (2009). 효율적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대테러리즘 정책 발전방안 연구. 국제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익균 (2016). 한국의 대테러리즘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원호 (2010). 테러리즘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근 (2007). 각국의 테러 대응 체계와 운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민 (2016). 이슬람국가(IS)의 미디어 전략과 폭력적 극단주의(CVE) 대응. 중동연구, 34호 (3).
- 서정민 (2015). 이슬람국가(IS)와 글로벌 테러 그리고 한국. 세종연구소, 통권228호, pp.10-13.
- 서정민 (2014). 새로운 테러의 시발점: 이슬람국가(IS). 세종연구소, 통권224호, pp.9-11.
- 신용욱 (2017). 한국형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체철 (2009). 한국의 대테러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세연, 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42호.
- 오세연, 윤경희 (2016). 자국 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겟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47호.
- 윤민우 (2016). 최근 테러리즘의 동향 및 국내 대테러 체계 구축 방향. 신안보연구.
- 윤봉한 (2015). 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 20권 제 4호.
- 윤해성 (2016).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이대우 (2016). ISIL의 파리 연쇄테러가 한국의 대테러 정책에 주는 함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1월호.
- 이황우 (2006). 주요 선진국 대테러정책조명.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 3호.
- 이호수 (2012).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인남식 (2015). 폭력적 극단주의 ISIL의 발호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상울 (2016). IS의 출현·확산 배경과 목표, 우리의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1월호. pp.2-3.

장성진 (2016). 한국의 테러환경 분석과 위기관리 전략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희동 (2013). 한국 대테러 정책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세일 (2016). 미국의 대 이슬람국가(IS)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테러정보통합센터 (2017). 2016년 테러정세 및 2017년 전망.

한희원 (2014).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희원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64호.

2. 기타자료

경향신문 (2016, 6, 13). 미 올랜도 총기 테러범인 ‘오마르 마탄’은 경찰 꿈꾸던 미국 이민 가정의 청년...범행 직전 “IS에 충성”.

머니투데이 (2013, 4, 25). 보스톤 테러범, CIA 테러분자 명단에 올라있었다.

스타뉴스 (2016, 6, 13). 美 올랜도 역사상 최악의 총격 테러 발생.. ‘100여명 사상’.

시사멀티매거진 (2014, 11, 6). 조직화된 테러조직 IS.

연합뉴스 (2015, 1, 21). 무엇이 김군을 8천km 떨어진 IS로 향하게 했나.

연합뉴스 (2015, 11, 14). 프랑스 공식발표 “6곳 동시테러로 최소 120명 사망·80명 중상”

연합뉴스 (2015, 12, 18). IS, 직접지시·자생테러 양대 전략.

연합뉴스 (2016, 3, 22). 브뤼셀 공항·지하철역 동시다발 테러...30여명 사망.

연합뉴스 (2016, 6, 30). 이스탄불 공항 테러범 무기·폭탄 감추려 겨울외투 착용.

유로폴 홈페이지(<http://www.europol.europa.eu>, 2017년 3월 15일 검색).

조선닷컴 (2015, 11, 25). IS 수세 물리자.

조선일보 (2015, 11, 19). 30개국에 통신거점 구축한 IS.

한국일보 (2015, 11, 16). IS, 테러모의에 PS4 네트워크 이용.

한국일보 (2016, 7, 15). 일상도구가 테러에 이용...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위협적.

【Abstract】

Trend Analysis on Islamic Terrorist Organization

Jeon, Su I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Counter-terrorism policy for protecting lives and properties of our citizens from threats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ncluding ISIL(Islamic State in Iraq and Levant) and for minimizing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terrorism.

For that I study ISIL's background, key figures, organizational size and linkage, major terrorist incident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al Qaeda and the Taliban.

Time range of this study includes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cases occurred since the 9.11 in 2001, and it mainly focuses on 7 major terror attacks led by ISIL its' associates or supporters, which took place after the rise of ISIL(June 2014).

Based on these analyz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easons why terrorism by Islamic terrorist organization could not be prevented in advance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current terrorism prevention law and its policy proposal for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I hope my study to be helpful and contributive in establishing practical Counter-terrorism policy for Korea and I expect further studies on legal provisions, response system and information sharing to be continued for preventing terror attack in Korea in the future.

Key Words: Islam, Terrorism, Counter-terrorism, Terrorism Organization, ISIL

* Korea Safety Education Policy Institute Researcher(The 1st Author)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정 지 덕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정 지 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양화·전문화되어가는 민간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현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경비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를 분석하며, 현재 민간경비 업무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교육훈련을 토대로 현대에 맞게 전문화된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무가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업무별(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로 나누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요소로 따른다. 자격제도가 경호·경비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자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법제화되어야 하고, 경호·경찰관련학과 소재 대학은 관·학·산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재와 강사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한국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의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지도사 제도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경비지도사 선임시 경력기준을 두어야 하며, 재교육과 경찰기관의 지속적인 감독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경비업체별로 경비지도사를 단독 선임·배치하게 하여 경비원을 실질적·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민간경비,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경비지도사, 경비원

* 김포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제1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및 문제점
III. 민간경비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IV. 결 론 |
|---|

I. 서 론

우리나라에 민간경비가 도입된 것은 미군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둔하면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와 주한미군부대의 군납경비를 통해서였고, 본격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은 1980년대 초 일본 민간경비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 활발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 하였다. 이후 차츰 한국정부와 일반기업체에서도 민간경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시설과 국영기업체,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산업공단에 대한 경비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추가로 민간경비회사들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민간경비의 중요성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최응렬, 2006).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법 제정 당시 10여 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게임, 1993년 '93대전 EXPO 박람회,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를 민간경비업체에서 행사기간 동안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업무를 자체적으로 큰 사고 없이 치르면서 역량을 인정받고 급성장하였다. 양적으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해서 민간경비가 고객의서비스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 수의 증가와 경비원 수의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기관내부의 제도나 체계 그리고 경비원의 자질이라

는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은 2016년 2월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신입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였으며, 경비업체별 형식적인 위탁 교육에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목은 새로운 경비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조정되는 등 교육훈련이 개편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비원 교육훈련은 과거에 비해 교육훈련규정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거에 비해 교육훈련조항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민간경비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순 업무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게 되었고, 경비원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양질의 민간경비서비스의 제공과 민간경비 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장에서 각기 다른 근무를 하는 경비원의 실무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과 교육기간, 교육훈련기관의 시스템 미흡과 강사들의 자질, 교육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학계와 현장 실무자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입교육 교과목 편성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특성과 종류를 고려한 현장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비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인 수요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유지시키는데 필요성이 있다.

II.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및 문제점

1. 교육훈련

1) 교육훈련현황

경비업법상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과 직무교

육에 관한 사항, 경비지도사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비원에 관한 교육훈련제도는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반경비원 교육훈련

2005년 12월 2일 ‘경찰청 공고 제 2005-19호’에 의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일반 민간경비원의 경우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또는 대학 및 사설 단체, 경비회사 등에서 신입교육 26시간을 받고 자체적으로 직무교육 월4시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¹⁾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과 연 심사분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개정 2006.2.2), 교육실시의 기관장은 신입교육의 과정을 마친 경비원에 신입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교부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

(2)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²⁾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

1)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 경비업법 제13조 2항.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³⁾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간 동안 특수경비 채용된 사람,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을 경비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며, 교육 장소는 경찰청장이 정하고,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전 88시간 이상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⁴⁾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 88시간과 직무교육 월6시간을 받도록 되어있다.

2) 자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제도로 경비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들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⁵⁾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⁶⁾

경비지도사 교육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비 부담으로 반드시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비지도사 교육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되고, 이후 재교육 시스템은 없다. 단 교육은 반드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세환, 2008).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며,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⁷⁾

3) 경비업법 제13조 3항.

4) 경비업법 제19조 3항.

5) 경비업법 제2조 2항.

6)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항.

7) 경비업법 제12조 2항.

- ①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③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④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 운영·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⑤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따라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⁸⁾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⁹⁾

3) 자격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제도와 일본,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자격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 일본, 미국 경비원 자격제도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제도	경비지도사	경비원지도교육 책임자제도	CPP (공인보호전문직)
도입기	1995년(1997년 시행)	1982년 (1983년 강습과정 시작)	1977년 시행
주관처	경찰청	국가공원위원회	미국경비산업협회 (ASIS)
자격취득 방법	시험합격 후 기본교육과정 이수	강습과정 이수 또는 경력인정	시험합격
자격인정	국가전문자격증	준 국가공인자격증	민간협회자격증

8) 경비업법 개정(2011년 4월 4일).

9) 경비업법 신설(2011년 4월 4일).

직무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원 지도계획 작성계획에 의한 근무실시 여부 감독과 기록 작성	-안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관리자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원교육의 제반사항 기록 및 관리	-예방조치에 관하여 교육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자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 장치의 운용·감독	-경비원교육의 실시기록의 기재에 대한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언등의 의무	
갱신제도	없음	3년에 1회 보수강습	3년마다 갱신

※ 자료: 임명순,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P.368. 재인용.

2.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

1)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근 경비업무자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민간경비원에 의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경비업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국내 민간 경비업무의 영역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의 다섯 가지 업무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일반경비와 특수경비로 구분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전문성의 결여

경비업은 고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무분야에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경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경비인력의 사명감이 부족하여 이직률이 높아 민간경비는 주로 전문성이 없는 단기 경력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김두현, 2002).

아직도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비인력의 전문성의 결여와 자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 자격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김태환, 박대우. 2005).

3) 형식적 교육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경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상위 몇 개의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영세성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하여 그 교육은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이상철, 김태민 2004: 296).

신입교육에 있어서는 새로 계약된 경비 현장이나 또는 결원이 생긴 경비대상에 신속히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의 서류만으로 경비원을 채용하여 간단한 경비수칙을 숙지시키고 인수인계 없이 그대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어 경비원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무교육의 경우 특별히 감독기관의 검열이 있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의 현장에서 간단한 근무내용만을 숙지하는 것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경비지도 점검시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4) 경비지도사 교육훈련제도

경비지도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비지도사가 민간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고 있는 바,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경비지도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44시간(공통시간 28시간, 실습교육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경비원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업체의 현장에서는 경비지도사 보다 오히려 경비원들이 더 많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더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므로 경비지도사 질적 향상과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박준석, 2010).

또한 최근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의 경력 등의 자격제도의 자체적 문제, 실무교육과 교육시설의 미비, 재교육 제도의 부재, 선임에 관한 사항 등 경비지도사제도의 자체적인 내용상의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민간경비원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III. 한국 민간경비원 전문성 향상 방안

1.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성 방안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을 위하여 업무별로 분야가 나누어 져야 한다. 일본은 상주경비, 귀중품운반경비, 경호경비, 기계경비로 나누어져 업무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한국 또한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의 경우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나누어져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을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론교육(5시간), 실무교육(20시간), 입교식·평가 및 수료식(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전문성 있게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로 나누어서 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론교육과 입교식·평가 및 수료식은 종전처럼 시행하고 실무교육 시간에 구급 및 응급처치법,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업무영역별 교육훈련 시간을 늘려 실시하여야 된다.

1)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각종 테러에 대비한 위험물 식별 및 대처요령,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 구급 및 응급처치법, 사고예방대책(상황대처법 및 연락방법), 호신술 및 질문검색요령을 세분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교육훈련 전문성 방안

구분	현행실시		개선방안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이론 교육	경비업법	3	좌동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2	좌동	2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2	좌동	3
실무 교육	호송경비실무	2	구급 및 응급처치법	2
	신변보호실무	2	위험물식별 및 대처요령	3
	기계경비실무	2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3	사고예방대책(상황 대처법 및 연락방법)	3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	3	호신술 및 질문검색요령	3
	장비사용법	2	좌동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4	좌동	2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3	좌동	3
계		28		28

2)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호송경비실무 시간에 기동간 안전 활동에 관한 교과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운전요원에게는 특수운전기법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전문화 하여야 된다.

따라서 기동간 혹은 정지간 호송경비요령 및 특수운전 기법과 교통통제 및 차량 유도방법에 대하여 8시간을 배정하여 단시간이나마 집중교육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운전기법은 호송경비 운전요원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으로 반복하여 숙달을 요구하는 교육훈련이므로 매월 실시하는 직무교육시 이론교육이 아닌 실습교육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호송 물건 탈취에 대비하여 사고예방대책(상황 대처법 및 연락방법)과 구급 및 응급처치법을 교육훈련 실시 하여 호송경비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표 3> 일반경비원 호송경비업무 교육훈련 전문성 방안

구분	현행실시		개선방안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이론 교육	경비업법	3	좌동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2	좌동	2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2	좌동	1
실무 교육	호송경비실무	2	좌동	8
	신변보호실무	2	좌동	1
	기계경비실무	2	구급 및 응급처치법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3	사고예방대책(상황 대처법 및 연락방법)	2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	3	좌동	2
	장비사용법	2	좌동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4	좌동	2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3	좌동	3
계		28		28

3)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까지도 경호원의 업무이다. 신변보호실무 시간에 근접경호 임무 수행방법, 차량경호 임무수행방법, 우발상황 대응방법을 중점으로 교육훈련 실시하고 구급 및 응급처치법,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을 교육훈련하여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체포·호신술 시간에 경호무도로 대체하여 신변보호의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또한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평소에도 최상의 무도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무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4>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 교육훈련

구분	현행실시		개선방안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이론 교육	경비업법	3	좌동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2	좌동	2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2	좌동	1
실무 교육	호송경비실무	2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	1
	신변보호실무	2	좌동	8
	기계경비실무	2	구급 및 응급처치법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3	사고예방대책(상황 대처법 및 연락방법)	1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	3	경호무도	4
	장비사용법	2	좌동	1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4	좌동	2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	3	좌동	3
계		28		28

4) 기계경비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기계장치에 의해 경비하는 시스템으로, 센스기술, 전자공학기술, 제어기술, 통신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하여 경비대상 및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침입여부 등을 감시하는 감지장치와 감지기의 감지신호를 받아 원격지의 관제센터로 신호를 송신하는 주장치 그리고 신호를 수신처리하고 지령하는 관제센터 및 이에 대처하는 경비요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계경비실무 시간에 기계, 전자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의 지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하여 기계경비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5> 일반경비원 기계경비업무 교육훈련

구분	현행실시		개선방안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이론 교육	경비업법	3	좌동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2	좌동	2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2	좌동	2
실무 교육	호송경비실무	2	CCTV 작동방법 및 관독방법	1
	신변보호실무	2	구급 및 응급처치법	2
	기계경비실무	2	좌동	8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3	사고예방대책 (상황 대처법 및 연락방법)	2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	3	좌동	2
	장비사용법	2	좌동	1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4	좌동	2
기타	업교식·평가·수료식	3	좌동	3
계		28		28

2.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민간경비산업 등 안전관리산업에 있어서 사회 안전 경비전문자격증 제도는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가에서 공인한 사회 안전 경비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각종 중요산업시설에 배치시킴으로써 경비인력의 자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허경미, 2006).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민간경비 분야의 근무 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이 분야의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다양한 국가공인 민간경비 자격증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권상로, 2006).

현재 민간자격으로 신변보호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사)한국경비협회와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부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원에서는 신변보호사 자격

중 국가공인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국가에서 직접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이다. 경비지도사는 현장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반해 신변보호사는 민간자격이며, 국가 공인을 받게 되면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신변보호사는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받는 대상이다. 신변보호 자격제도를 통해 우수한 경비인력이 경호경비업계로 유입되면 경호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경비원지도감독책임자제도와 경비원검정제도가 병존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서진석, 2011).

자격제도에 특성화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요소로 따른다. 자격제도가 경호·경비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자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법제화되어야 하고, 경호·경찰관련학과 소재 대학은 관·학·산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재와 강사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한국 민간 경호·경비산업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박준석, 2006).

3.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개선

경비원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특수경비원 교육훈련과 일반경비원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교육성격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입교육은 신규로 채용되어 경비업무에 임하는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현재 경비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경비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직무의 능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본인의 발전과 경비업무의 생산성의 향상이다. 경비업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교육과정은 각 과정마다 시기와 일정, 규정된 과목이 정해져 있어 경비원은 개인적 선택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일방적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로 선택의 폭을 넓혀 높은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은 형식적이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교육훈련이 개선되고 교육훈련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교육훈련의 부정적 인식은 사라질 것이다. 경비원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산성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단순한 지식과 기법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생 직업으로 여기며, 고객을 위한 전문성 있는 업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차별화된 전문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 있는 교육은 경비업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을 한 층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담당자는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계획, 활동지원,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경비원들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경비원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수기법 및 연구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을 통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인식이 우선시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인식의 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경비업의 전문화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할 수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4. 경비지도사 제도의 전문성 방안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5년 12월30일 경비업법 제5차 개정(법률 제5124호)시 도입되었다.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한국경비협회, 2011).

현재 경호·경비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매년 일정 이상의 인원을 상대평가로 선발하여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비업체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하여 유망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어 수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경비지도사의 경력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시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력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18세에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19세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실제 경비현장에서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19세 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수년 동안 경비현장에서 경력을 갖춘 경비실무자를 지도·감독·교육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경비업무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다.

경비현장에서 선임·배치되는 경비지도사는 최소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재직한 사람,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대학 이상의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재교육

현행 경비지도사제도에 있어 가장 선행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경비지도사의 중복 선임이다. 경비지도사는 1개 경비업체에만 선임·배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경비지도사가 여러 업체에 중복 선임됨으로써 해당 경비업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실제 경비원에 대한 경비지도사의 기본직무를 태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와 다름 등 문제가 있는 시설경비(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은 24시간 전까지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지도·감독·교육하기 위해 경비원이 배치된 현장에 나가야 하지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여러 곳일 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 이럴 때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소속감이 결여되어 형식적인 교육이나 담당경찰관에게 보여주는 정도로서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해당경비업무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해 경비업무별로 경비지도사를 단독 선임·배치해야한다. 즉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나목의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규정을 기계경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의 각각의 해당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김태민, 2009).

따라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효과적, 지도·감독·교육의 실시, 경비업무별로 많은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되는 효과가 발생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호경비관련학과 출신의 전공자 및 고학력자의 경비업체 유입 등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적 기본 직무 수행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서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이 발급되며 이후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3년에 1회씩 경비원지도교육에 관한 보수 강습을 하며, 미국은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경비지도사의 실무적 역량강화를 위해 최소 3년마다 정기적 보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찰기관의 감독 강화

현재 민간경비의 감독 권한은 경찰에 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¹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¹¹⁾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은 경찰시험에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경비업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관할관서에서 매년 2회 정기 지도 점검 시 경비지도사의 선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서류(고용계약서 및 의료보험가입서류 등)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10) 경비업법 제24조 1항.

11) 경비업법 제24조 2항.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기관에서는 이러한 감독권에 따라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3,6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부족한 경찰력의 문제로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특정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관할경찰서마다 경비업체의 수가 많고 적어서 분기별 단속시 낱짜를 정해서 지도·감독하며 업체를 방문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경비원 신임·직무교육 실시 여부, 배치신고 된 명단과 현장 경비원 일치 여부, 경비업 도급실적 및 허가 외 업무종사 여부, 경비원 명부 등 각종 부책 작성·비치 여부, 집단민원현장 등 배치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 등 법령위반 여부, 경비지도사 선임 및 경비원 지도 감독·직무교육 실태, 호송경비업체 '현금호송 원칙' 등 준수 여부, 기계경비업체 고객정보 관리실태 등으로 대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업체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비업에 담당하는 경찰관의 민간경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I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 방향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민간경비업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 하였다. 현행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경비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경비업무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경비원의 교육훈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업무가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업무별(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로 나누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요소로 따른다. 자격제도가 경호·경비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자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법제화되어야 하고, 경호·경찰 관련학과 소재 대학은 관·학·산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

재와 강사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한국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의 인식의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인식이 우선시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인식의 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경비업의 전문화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할 수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경비지도사 제도의 전문성 향상 방안은 경비지도사 선임시 경력기준을 두어야 하며, 재교육과 경찰기관의 지속적인 감독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경비업체별로 경비지도사를 단독 선임·배치하게 하여 경비원을 실질적·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경비원들에게 제공된다면, 민간경비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길훈 (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영길 (2007).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배완 (2006). 민간경비원의 자격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연례학술세미나.
- 권상로 (2006).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22집, p.22.
- 권태일 (2004).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태 (2006).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문집 제3권 제1호, p.4.
- 김두현 (2002). 경호·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5집 한국체육대학교, p.255.
- 김성언 (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열 (2001). 민간경비업체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1호, pp.71-107.
- 김태민, 강영길 (2009). 한국 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문집 제6권 제1호, p.195.
- 김태환, 박대우 (2005).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3호, p.469.
- 박동균 (2008).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p.135.
- 박동균, 배철효 (2007).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p.125.
- 박병식 (2002). 민간경비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학회, p.2.
- 박준석 (2008). 한국 민간경비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 박준석 (2006).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제9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p.87.
- 배철효, 김용현, 박영주 (2009). 신입경비원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p.3.

- 이강문 (2004). 한국 민간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실태 및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민형 (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원 (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pp.93-100.
- 이상철, 김태민 (2004).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8호, pp.295-296.
- 이세환 (2008).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 방환복, 최진혁 (2008). 민간 시큐리티 종사자의 신입 교육에 따른 전이효과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 이창무 (2003). 미국 시큐리티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호, p.273-289.
- 임명순 (2003). 한국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호, p.169.
- 임명순 (2006). 민간경비원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p.368.
- 조용철, 김순식(2008).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pp.349-350.
- 조정우 (2000). 한국 민간경비원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응렬 (2006).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세미나 발표논문집, p.11.
- 최응렬, 오규철(2006).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p.209-242.
- 허경미 (2006).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자료집, p.18.
- 허경미, 박영주(2007).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p.532.

【Abstract】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Training and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 in Korea

Jung, Ji Deo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by effectively managing diversified and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analyzing actual situation to improve the problems of 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practiced by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and security companies, The concept of practical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security work is now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training specializing in the modern age based on exis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study, the way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guards training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divide general security guards into separate tasks (facility security, personal security, personal security, and machine security) to pursue professionalism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o that private security work can be positioned as a profession. Second, legal backing is essential for granting professionalism to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qualifications system to secure professionalism.

In order for the qualifications system to be applied specifically to the security and security affairs, strong sanctions on qualifications for job duties should be legislated, Police-related departments and colleges.

The university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of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university's excellent talents and lecturer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ity of the private security and security industry in Korea.

Third, qualit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urth,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guard instructor system, the examination standard should be strengthened, the career standard should be set when the guard instructor is appointed,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supervision of police agencies are required.

In addition, by appointing and arranging the guard instructor independently for each guard company,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expertise by realizing the security guards practically and effectively.

Key Words: Private Security, Education Training, Education Programs,
Security guard instructor, Security Guard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이 삼 기 · 김 건 희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이 삼 기* · 김 건 희**

[국문초록]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다양화의 시대를 맞아 치안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화로 인한 경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귀중품 등은 그 현가성이 뛰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11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에서 현금 2억 1900만원을 실은 현금 수송차량 탈취사건이 발생하였다. 현금수송차 범죄는 대부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호송경비의 사건사례를 통하여 그 발생의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호송경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최저가 입찰방식을 벗어나 적정한 금액을 전문가들로 산정케 하는 적정가 입찰방식을 통하여, 전문화된 인적자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호송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저하로 인한 사기진작과 직업사명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비지도사를 통해 직업윤리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호송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호송경비업을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꾀하여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수행 시 범죄예방을 위한 메뉴얼의 구체화·표준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주제어: 민간경호경비, 호송경비, 장비사용, 장비교육, 검사기준

*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제1저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외래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론
II. 호송경비의 의의
III.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
IV. 한국호송경비의 문제점 개선방안
V. 결론

I. 서론

현대 우리사회는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규모의 팽창과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범죄는 지능화 되고 있다(주철현, 2008).

특히 경제 성장은 물질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생활수준은 안정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김남중, 2010).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공적부분과 사적부분에서 협력을 하는데, 법집행과 범죄대응은 경찰이 범죄예방은 민간경비가 각각 담당토록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이성진, 김의영, 2005).

그동안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법령은 「경비업법」)이 제정된 후, 1995년 신변보호업무 추가,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령 개정, 2001년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추가하는 등 2013년 17차 개정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질적·양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그 중 호송경비업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경비업의 한 부분(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

의 도난·화재 등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으로 제도화되었다. 다른 경비업무 중 신변보호업무가 1995년,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는 2001년에 신설된 것으로 볼 때, 호송경비업은 민간경비가 한국에 제도화된 초창기부터 민간경비의 주요업무라 견주어 볼 수 있다.

2013년 경찰청 통계자료 전체범죄 발생 및 검거추세를 살펴보면,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다양화의 시대를 맞아 치안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 불화에 따라 지난 5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의 발생건수를 넘어섰다. 2012년 강력범죄는 201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도 범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폭력범죄와 지능범죄는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범죄 발생 대비 검거현황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흡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환경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비업체는 4,077개이며, 이 중 호송경비업체는 4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금 또는 귀중품의 특성상 한 번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호송 경비원의 인식에 따라 범죄의 유혹에 빠져 끊임없이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에 전반적인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형 범죄가 증가하며 국내에 끊임없이 현금호송차량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4년 3월 10일 새벽 3시29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에서 현금수송업체 직원 2명이 영업소로 들어가 현금을 회수하는 사이 현금 2억1900만원이 들어 있던 수송차량을 탈취한 뒤 현금만 챙긴 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미 2010년 경찰청장은 「감독명령 제10-1호」를 발령하여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수행해야하며,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남아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3명(드라이버, 메신저, 가드)이 현금호송 시 1조를 이루어야 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일어난 A업체의 경우 저가입찰제로 인한 낮은 마진 탓에 그 규정을 어기고 2명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드라이버가 차량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전직경비원에 의하여 호송차량이 탈취당하는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

현금 또는 귀금속은 현가성이 뛰어나므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호송경비원의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의 저하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또한 호송경비의 특성상 경비업무 중 알게 된 호송루트나 허술한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현직 호송경비원의 사건은 전반적인 경비원의 인식저하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호송경비원 또는 전직 호송경비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시키며 호송경비업무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며 신뢰감 있는 호송경비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호송경비의 의의

1. 민간경비의 의의

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광의의 표현으로 볼 때는 방범, 방재, 방화, 범죄, 사고 등의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주양선, 2013).

서진석(2002) 또한 민간경비의 기본적 목적은 좁게는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있으며, 넓게는 범죄(Crime), 사고(Accidents), 낭비(Waste), 테러(Terror), 비윤리적 활동(Unethical practices) 등의 여러 가지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민간경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탄생한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이 있다. 박병식(2002)은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 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Private Security’를 ‘민간경비’로 번역하여 시험과목을 ‘민간경비론’으로 정하고자 제안한 것이 최초이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범죄문제와 안전 위해요소로 말미암아 당시까지 국민의 안전문제를 책임져 온 국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으며(김종웅, 2008)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 민간경비의 특성

역사적으로 볼 때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를 통해 민간경비만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공경비란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인 경비, 검찰, 경찰, 교정기관, 소방과 같은 기관을 의미하나, 대개는 경찰에 의하여 제공되는 치안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수사의 권한, 범죄 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諸活動)을 말한다(김두현, 김전형, 2002).

민간경비는 국가나 관에 속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이론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업체가 지불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공의 안전 보단 대상자 또는 대상물에 대한 안전을 목표로 한다. 주로 국가공권력인 공경호의 역할이 법집행과 체포·수사를 담당하는 국가행위이지만 민간경호는 계약에 의하여 대상자 또는 대상물의 안전 및 재산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개념은 주로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산보호, 보안 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바이오 매트릭스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김성언, 2004).

<표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

구분	민간경비	공경비
수요자	고객	시민
공권력작용	강제권 극히 제한	강제권 보유
역할 및 기능	예방적	진압적
수혜자	특정대상	일반시민
운용자	영리목적 개인 및 기업	정부
목적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	법집행 및 범인체포

※ 자료: 박동균, 이은석, 2007.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공경비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범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수요자로부터 받은 대가만큼 그 특정한 사람에게 범죄 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공권력 작용에서 보면 공경비는 범집행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경비는 아직 공경비 만큼의 믿음을 얻지 못하여 일반시민 이상의 권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셋째, 업무의 수혜자면에서 민간경비는 특정대상을 공경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체 면에선 민간경비는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려는 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사회전체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 기관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특성상 공통이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민간경비가 사적이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경비는 위협의 예방 및 방지,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공공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박영진, 2005).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를 감소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경비는 보수나 대가를 기반으로 고객이나 대상물에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2. 호송경비의 의의

1) 호송경비의 개념

호송경비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제2조 제1호 나목)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호송경비업무란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여러 호송 방식을 동원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각종 선거의 투표함, 대학수능시험지 등의 수송경비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등과 같은 물건은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가 담당한다.

각종 흉기로 무장한 강탈·강도 사건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건들로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체나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는 전문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김충현, 2007).

2) 호송경비의 특성

호송경비는 18세기경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귀중품을 운반할 때 범죄자들의 습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훈련된 병사나 무술을 익힌 호송인을 고용한 것이다. 현대의 호송경비 조직은 일반적으로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과 총무부(인사복지관리, 계약관리 등), 운영부(호송활동, 차량지원, 상황통제 등)로 구성되며 호송의 편성은 조직의 규모나 호송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대의 차량단위 또는 여러 대의 차량 단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호송경비에서 호송편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도로상태, 이동거리, 지형, 기후, 범죄, 호송요원의 훈련 및 경험을 고려해야하며, 호송팀장은 교통법규, 속도, 규정, 차간거리, 행로, 시간계획, 이동 및 정지간의 자세, 자체 경계방책 등 도로상의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경비원은 중요한 지점의 교통통제, 복잡한 지역에서의 안내, 중요하거나 위험한 적재품의 안전호송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송경비의 호송방식은 단독호송방식과 편성호송방식으로 구분된다. 단독호송방식은 경비업자가 자사소유의 무장호송차량 또는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와 경비업무를 겸하는 통합호송방식과 운송업자가 호송대상 물건을 자신의 차량으로 적재 운송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차량과 경비원을 통해 호위하는 분리 호송방식,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차량에 경비원이 동승하여 호송업무를 하는 동승호송방식, 마지막으로 경비원이 직접 호송대상물을 휴대하여 운반하는 휴대호송방식으로 구분된다. 편성호송방식은 조를 편성하여 이뤄지는 경비업무이다.

호송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호송경비원, 호송경비차량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며 위험에 있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송물품을 인수 할 때 주의를 기울이며 운송 중 이동할 때에도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주의해야 한다.

호송경비는 운송 중이라는 특성 때문에 강탈, 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인적위해요소로부터 대상물의 범죄 기회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 때문에 외부

로부터의 습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송방식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운전석과 금고실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금고의 구조와 호송경비원 3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 강탈 시 신뢰도가 높은 정보장치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송경비원들에 대한 점호 실시와 운행 전 안전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차량 정체 구간에서의 범죄 확률을 낮추려 노력해야 한다.

「경비업법」에서 호송경비원은 일반경비 업무에 속해 다른 시설경비원, 신변보호원, 기계경비원과 함께 신분과 결격 사유가 같이 명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각 목(「형법」 제114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각 목(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2013년 6월 7일 개정되며 한층 강화 되었다.

의무와 배치도 「경비업법」에서 일반 경비원과 같이 적용이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업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호송경비업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호송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비업법」에서 호송경비업의 허가를 위해선 경비업자가 우선 그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비업법 시행령」에선 무술유단자 5명 이상, 1억 이상의 자본금(2013년 개정, 2014년 6월 8일 시행),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기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III.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례분석

1. 호송경비의 현황

호송경비는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인출기의 증가와 같은 금융거래 서비스 수요와 현금 운송 서비스 수요의 증가 그리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무인 주차요금의 현금회수, 귀금속이나 유명상품 판매유통의 변화 등 경찰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위험성 대비, 호송경비업무가 가지는 높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점차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주양선, 2013).

<표 2> 경비업체현황

구분	업체수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원수
2009	3,270	2,923	489	50	139	84	146,805
2010	3,473	3,144	514	52	140	94	142,363
2011	3,651	3,351	540	45	152	115	146,286

구분	업체수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원수
2012	3,836	3,529	527	41	148	122	150,030
2013	4,077	3,718	525	42	145	139	151,741

※ 자료: 사이버경찰청, 201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비용이나 호송차량의 수급, 하도급의 영향으로 몇 개의 대규모 호송경비업체가 호송경비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를 보았을 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업체수와 경비원의 꾸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호송경비는 업종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형태에서 다양성을 띄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운반경비업무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하여 단순 귀중품 등을 대상으로 한 호송경비 이외에 위험물 운반경비업무를 융합시켜 다양하고 포괄적인 경비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김일곤, 2010).

<표 3> 국내 현금호송 메이저급 업체 3사 시장 점유율

구분	2007	2008	2009	비고
한국금융안전	34,660 (36.2%)	39,227 (37.5%)	41,449 (39.1%)	
브링스코리아	29,489 (30.8%)	36,610 (35.0%)	38,331 (36.2%)	자본금
발렉스코리아	14,611 (15.3%)	16,752 (16.0%)	26,189 (24.7%)	K사 60억
시큐리티코리아	16,918 (17.7%)	12,000 (11.5%)	발렉스에 합병	B사 12억
계	95,678 (100.0%)	104,589 (100.0%)	106,019 (100.0%)	V사 10억

※ 자료: 김성수,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 인프라(인원, 호송용 차량) 확보나 유지비용 및 신용보험 등의 문제로 소수의 메이저급 호송경비업체가 호송경비업무를 독과점 하고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에서 K사가 선두이지만 업무가 제한된 시장에서 금융권 업무의 수주에 따라 업체 간 점유율 변화가 생기며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현금호송업체의 수익구조 단순화로 업무가 극히 제한되어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의 불황과 범죄의 흉포화로 현금호송범죄가 날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미 경제적 규모가 커진 대도시에서 호송경비업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황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산업화·도시화·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 호송경비의 역사와 업무 형태는 선진외국에 비해 다소 미약하지만 앞으로 장기적 전망으로 보아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핵폐기물 등의 위험물 호송에도 업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등 현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호송경비 사건사례 종합 프로파일링

<표 4> 국내 호송경비 사건사례 분석표

사 건	문 제 점	범 인	비 고
1 부산(2014)	2인 1조 근무, 경비원 모두 차량이탈, 부적합한 현금호송차량, 현금호송차량 관리 소홀, 경비원 의식부족, 경비원 배치신고를 안함.	전직호송경비원	차량도난 (정차 중)
2 천안(2011)	일반 화물차로 현금호송, 경비원의 전문성 부족.	미 제	강도 (정차 중)
3 구미(2010)	경비원 모두 차량이탈, 부적합한 현금호송차량.	현직호송경비원 공모	차량도난 (정차 중)
4 용인(2010)	2명 근무, 전문 호송경비원이 아님, 현금호송차량 관리소홀.	외부자 소행	현금절도 (정차 중)
5 서울(2010)	2인 1조 근무, 경비원의 전문성 부족.	외부자 소행	날치기 (정차 중)
6 청원(2009)	2인 1조 근무, 경비원의 의식 부족.	외국인 소행 (검거X)	현금도난
7 서울(2008)	허술한 경비원 채용과정.	전직호송경비원	차량도난 (정차 중)
8 포항(2003)	늘 같은 코스 주행, 경비원의 의식부족, 경비원 모두 차량이탈.	외부자 소행	차량도난 (정차 중)
9 대전(2003)	경비원 모두 차량이탈, 현금호송차량 관리소홀.	미 제	차량도난 (정차 중)
10 대전(2003)	전문 호송경비원이 아님, 전문 호송차량이 아님, 잠금장치를 안 함.	미 제	현금도난 (정차 중)

3. 호송경비 사건사례 종합 프로파일링 분석

현금수송차 범죄는 대부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있다. 위탁업체가 도맡아 하는 현금수송업의 경우, 한 달 120만 원 안팎에 불과한 박봉에다가 초과 근무는 밥 먹듯 하지만 시간외 수당은 거의 없는 이른바 3D직종에 해당한다. 이러니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보안에 구멍을 뚫는 ‘구조적 화’까지 부르고 있는 셈이다. 현금 수송차량 도난 사건은 최근 14년간 15건으로 매년 한 건씩 발생했다고 한다. 근무를 하면서 습득한 정보가 바로 범행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업계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호송경비원들의 사회적 인식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호송경비업무의 다양성과 보급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현금호송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금호송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호송경비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출발 직후 또는 목적지 도착 직후, 경비원이 승하차하는 순간, 금고실을 열고 작업하는 순간, 운송담당자가 떨어져서 다른 작업을 하는 중에 많이 발생한다(김두현, 김정현, 2002).

또한 「경비업법」상 나타나 있는 3인 1조 근무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비원 모두 차량을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경비업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호송경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특장차가 최근 들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업체들은 비용 때문에 승합차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현금수송차량들을 노린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업체들은 잠금장치나 금고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쉬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차량관리 소홀이나 전문 차량 미비성에서 호송경비원과 호송경비업체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호송경비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저가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지다보니 장비와 직원교육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호송경비원과 호송경비업체는 허술한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 저가낙찰경쟁 속에 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V. 호송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가입찰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즘 건설업의 경우에 저가입찰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호송경비 업무에서도 저가입찰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업체가 수주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잠재적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발주 업체에서는 낮은 가격으로만 호송경비를 수행하려하고 이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호송경비의 특성상 인력이 업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저가 입찰로 인해 호송경비업체는 수익창출이 어려워지며 이는 경비원 급여의 하락, 복리후생의 하락, 근무환경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08년 청담동에서 있었던 호송경비 사건에서는 전직 호송경비원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었다. 전과 16범이었던 당시 직원은 허술한 채용과정을 통해 업체에 취업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다 범죄를 계획하고 퇴사 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현재 일선에서는 이렇듯 경비원 채용규정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인 호송경비원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가입찰은 호송경비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호송경비원들이 근무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급여문제와 복지의 하락, 차량에 중요물품이 적재되어 있을 시 식사를 차에서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다. 많은 임금을 줄 수 없기에 질 낮은 경비원을 채용하고 이는 업무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별한 전문 자격이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 호송 경비원은 누구나 취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업체들도 급여에 맞추어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호송경비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중요물품을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방어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낮은 급여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로 인해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우발상황 시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고객의 중요물품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체의 역량과 전문성,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덤핑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우리나라를 혼란에 불러 오기도 한다.

따라서 입찰 시 호송경비업체의 교육, 훈련, 인사, 보수 등의 업체 수준과 호송경비원들의 복리후생, 급여, 근무환경, 경력, 자질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입찰하며 입찰 금액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금액을 전문가들로 산정하게 하여 그 금액에 가장 적합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입찰하도록 하는 적정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호송경비원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비업법」상 호송경비원은 일반경비원으로 분류되어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경비업무가 다양화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경비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호송경비업 뿐만 아니라 시설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 업종에 대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일괄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점은 여러 학계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호송경비업은 고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요물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호송경비업체가 일정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경비원들의 부족한 경각심과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하로 높은 이직률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호송경비업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2014년 6월전에는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채용 후 2개월 전에만 교육을 받으면 법적 제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비원은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다. 교육자체가 수시로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하여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교육이 있어 직원을 채용하고도 업무에 투입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있는 호송경비의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메이저급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매일아침마다 교육이 진행되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 일괄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영세업체에 경우엔 제대

로 된 교육자체가 불가능하고, 교육기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제대로 교육시설과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전공에 맞는 적재적소의 강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인맥에 따른 임기응변식 강사가 배정되고 있다(강영길, 200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관련 국가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가 있고, 국가공인자격으로는 ‘신변보호사’가 있다. 호송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중 ‘일반경비지도사’인데 이 연구자는 호송경비원만의 독자적인 경비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른 업무와 달리 호송경비업무는 중요물품을 항상 접하는 등 특수성이 있고 호송경비업무를 전혀 접하지 않은 일반경비지도사가 호송경비업무를 수년 동안 수행해온 호송경비원들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비지도사는 실제적으로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사실상 호송경비지도사의 경우 실무에 관련 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호송경비원들의 직업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호송경비원만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경비지도사가 배치되어 호송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전·현직 호송경비원들의 의한 사건사태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현금 등의 중요물품을 매일 접하는 호송경비원들은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직업윤리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윤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에서 호송경비원들이 현금을 다루다 보니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기를 기피하던 예전과 달리 회사 자체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여 호송경비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호송경비원에 의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가중처벌 해야 하며 해당 호송경비원의 신상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비협회에서 호송경비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성을 구축하고 전문성 또한 높여 호송경비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장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호송경비업무는 특성상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관할 구청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위의 관계부처는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호송경비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차량의 등록에 관여한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협력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호송경비의 경우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노후 되어 폐차하여 차량을 다시 구매해 놓고도 관계부처의 협조체계가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태민과 이상철(2009)은 관계기관이 꾸준하게 경비업체가 적정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원활한 협조·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호송경비업체는 메이저급 3개의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과점이란 독점 또는 과점적 시장상태를 의미하며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점유율, 시장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되어있다(표순철, 2011).

호송경비업체 시장은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과 달리 업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호송경비라는 특성(전문인력, 전문차량 등)상 타 업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저가 입찰 경쟁과 맞물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긋나 낮은 금액의 입찰이 형성되어 호송경비업 전반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는 저가입찰 경쟁을 증폭 시키고 저가입찰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복지,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호송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은 저하되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업무의 사명감을 갖지 못하게 되며, 호송경비 업무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연속된다.

호송경비 업체는 현재 호송경비업무의 주 고객인 금융권 외에 다른 업무로도 업무의 다양성을 꾀해야한다.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사업 다각화를 이뤄 한정되어 있는 금융권의 업무를 대체 하여 금융권 고객의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핵폐기물, 조폐공사 현금수송 등으로 업무를 다양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국가중요 시설에서의 업무는 「경비업법」에서 특수경비로 한정되어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보다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호송경비가 이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TM기기, 제2금융권의 현금 호송, 무인경비 등 다양한 업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호송경비업무 수행 시 메뉴얼을 구체화·표준화 하여 전문성과 회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호송경비업체의 경쟁력이 되어 앞으로 호송경비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VI.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 끊임없이 현금호송차량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현금 또는 귀중품의 특성상 한번에 많은 돈을 벌어 은닉할 수 있고, 호송 경비원의 인식에 따라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의 호송경비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경비업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었다. 다른 경비업무 중 신변보호업무가 1995년,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는 2001년에 신설된 것으로 볼 때, 호송경비업은 민간경비가 한국에 제도화된 초창기부터 민간경비의 주요업무라 견주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들과 독과점, 한정된 시장 등으로 인해 여러 경비업 중 가장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무 중 호송경비업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호송경비업에 관한 개념 및 법적·운용적 특성,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재 국내에서의 호송경비업 문제점을 지적하여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호송경비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의 질을 낮추고 호송경비업의 사회적인 인식을 저하시키는 저가입찰에 대한 방안으로는 입찰 시 호송경비업체의 교육, 훈련, 인사, 보수 등의 업체 수준과 호송경비원들의 복리후생, 급여, 근무환경, 경력, 자질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 금액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금액을 전문가들로 산정하게 하여 그 금액에 가장 적합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입찰하도록 하는 적정가 입찰 방식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윤리 및 직무에 관해 적절한 강사 배정이 되지 않고 호송경비원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인식저하를 초래하는 호송경비업의 현시점에 대한 방안으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호송경비원들의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호송경비원만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경비지도사가 배치되어 호송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호송경비원에 의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가중처벌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당 호송경비원의 신상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비협회에서 호송경비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시장에 한정된 호송경비 업체만이 독과점하고 있는 현 호송경비시장에 대한 방안으로는 호송경비업무의 주 고객인 금융권 외에 다른 업무로도 업무의 다양성을 꾀해야 하며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사업 다각화를 이뤄 한정되어 있는 금융권의 업무를 대체 하여 금융권 고객의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ATM기기, 제2금융권의 현금 호송, 무인경비 등 다양한 업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호송경비업무 수행 시 매뉴얼을 구체화·표준화하여 전문성과 회사의 이익창출에 도움을 주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끊이지 않는 호송경비 관련 사건들이 재조명되어 다시 한 번 호송경비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되어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한정된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호송경비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못한다면 호송경비업계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이 연구가 호송경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면 바램이며, 호송경비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같이 논 해보고 실질적인 개선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길 (2010). 민간경비와 교육훈련. 도서출판 한국학술정보원.
- 권영관 (2013). 시큐리티 시스템 및 서비스. 서울: 진영사.
- 김두현 (2008).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 김두현, 김전형 (2002).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성태 (2003). 민간경호론. 서울: 건기원.
- 김순석, 김양현, 김대권, 정병수, 이도선, 정의륜 (2013). 신경향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재광 (2004).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주현 (2004). 민간경비실무론. 서울: 학문사.
- 박주현, 박인숙(2013).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 박준석 (2006). 경호학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박준석 (2014). 산업보안·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서진석 (2012).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 안황권 (2008). 경호경비법론. 서울: 백산출판사.
- 안황권 (2009). 민간경비학. 서울: 진영사.
- 강영길 (2007).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한곤 (2009). 민간경비원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중 (2010). 민간경호경비의 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0).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고찰을 통한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지 제25호.
- 김성언 (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웅 (2008). 한국 민간경비 역할증진을 위한 특수경비업무 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웅 (2013). Smart Module System을 활용한 효율적인 호송보안 방안.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현 (2007). 지방경찰제도에 있어서의 민간경비의 역할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민, 신상민 (2004). 기계경비 대치요원의 임무수행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지 제7호.

- 김태민, 이상철(2009). 호송경비업의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5호.
- 김홍규 (2013). 국내 특수경비원의 문제점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수 (2013). 민간경비 종사자의 직업윤리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품질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균, 이은석(2007). 주요선진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사례분석과 시사점.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호.
- 박영진 (2005).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식 (2002). 민간경비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 서상렬 (2008). 한국 민간경비의 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진석 (2002).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와 새로운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세기 질서행정, 성석 정진환교수 정년기념논총.
- 송수복 (2013).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한 시론: 직무와 권리권한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세용 (2003). 경호시스템의 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근 (2008). 민간경호원의 무도수련과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진, 김의영 (2005).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2호.
- 이세환 (2008).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 (2011).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석인 (2010). 한국 민간경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정립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황, 소승영 (2010). 기계경비의 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 주양선 (2013). 민간경비원의 법·제도적 인식수준과 직무만족에 관한 실 증적연구. 서울권위탁경비업체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정훈 (2009).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철현 (2008).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이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표순철 (2011). 영화콘텐츠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준수 (2012). 민간경비원의 고용불안이 직무태도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원용 (1997). 현금수송구조의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창간호.

2. 기타자료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2017년 5월 19일 검색).

사이버경찰청자료실(www.police.go.kr, 2017년 11월 2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h Transportation Case in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rea

Lee Sam Ki* · Kim, Kun Hee**

In the 21st century, the security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and uncertain amid the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 globalization, and diversity. In recent years, economic crimes caused by economic conflicts have been increasing, especially cash and valuables are subject to crime as they are highly valued.

On February 11, a case took place at the Busan Express Center on the Gyeongbu Expressway, in which a carry-out of a cash-transferred vehicle was conducted with cash amounting to 420 million won. Most of the crime in cash transport cars involved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who are familiar with internal affair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causes and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transport security.

First, through the proper bidding process, which requires the experts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beyond the low-price bidding method, it creates an opportunity fo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o enter the facility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ork force.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professional ethics and job education programs based on professional expense maps with experience in providing transport security services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nsport security service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of Research Conductor (The 1st Author)

**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 Security Service Adjunct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Thir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cope of projects by seeking to diversify out of the existing transport transport business, and to cultivate professionalism by specifying and standardizing manual for crime preven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work.

Key Words: Private Security, Transportation Security, Using Equipment, Equipment Education, Inspection Standard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박 찬 수 · 권 혁 빈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박 찬 수* · 권 혁 빈**

[국문초록]

현대사회는 물질이 곧 가치였던 과거의 공업화 사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정보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절도·수집의 경우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뉘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으로 인적관리의 개선과, 민간경비의 보안업무에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인적보안의 유형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국정원, 경찰, 산업부, 검찰)과 민간경비 협조체제의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전공자 및 전문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산업보안, 기술유출, 민간경비, 인적보안, 전문인력

* 용인대학교 대학원(제1저자)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론
II.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와 유형
III.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IV.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대응방안
IV. 결론 |
|--|

I. 서 론

현대사회는 물질이 곧 가치였던 과거의 공업화 사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정보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홍빈, 2014).

오늘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운송기술과 물류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 한정돼 있던 기업들의 경쟁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이에 기업에 있어 산업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최낙영, 2008).

문제는 산업기술유출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의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출된 첨단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하면 연평균 50조원으로 추정¹⁾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GDP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유출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기술은 주로 최첨단 산업기술로, 국제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1) 산업기술보호센터(http://www.nis.go.kr/AF/1_5_1_1.do, 2017년 10월 15일 검색).

및 경제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을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하며, 2015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²⁾ 현재 한국은 전기전자 11개, 자동차 7개, 철강 6개, 조선 7개, 정보통신 8개, 우주 2개, 생명공학 3개, 원자력 3개 등 8개 분야의 총 47개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개정고시 되어 있다.³⁾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증가와 공공기관의 인력과 업무적 한계, 정보유출 장비의 간편·간소화, 범죄의 지능화 및 범죄자의 주체적 문제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보안과 민관협조체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배경과 사례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 및 유형

1.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

이정민(2014)은 산업보안의 개념은 산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모든 정보, 문서, 시설, 자재 등의 유·무형 재산을 산업스파이로부터 침해, 분실, 도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적수고를 투자해 과학적, 경험적 실험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을 산업기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분야의 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적 노력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이렇게 개발된 산업기술 중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을 첨단산업기술이라고 한다.

산업기술유출이란 특정 기업의 기술정보가 내부직원이나 외부침입자에 의해 빼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3) 산업기술보호센터(http://www.nis.go.kr/AF/1_5_2.do, 2017년 10월 15일 검색).

돌려져 경쟁기업으로 입수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잠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기술을 도용한 기업은 개발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아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은 산기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입장으로 산업기술유출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유형

연희모(2013)에 따르면 B. Parad가 정리한 79종의 기술유출 방법과 7가지의 형태 등을 분류하여 ①스카우트, ②기업내부자의 매수, ③무단침입, ④전통적인 절도, ⑤위장침투, ⑥컴퓨터 접속 또는 해킹, ⑦인터넷 활용, ⑧방문, ⑨전송자료 가로채기, ⑩정보브로커, ⑪휴대전화 도·감청, ⑫자료의 촬영·녹음·도청, ⑬항공촬영, ⑭평가 및 상품분석, ⑮위장합작 등 크게 15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연희모의 연구에서 유형별 유출수법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1) 스카우트

기밀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핵심직원을 더 좋은 직급이나 대우로 스카우트하는 방법이다. 기밀정보 수집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2) 기업내부자의 매수

해당 기업의 기밀정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내부의 핵심직원을 이득제공으로 매수하여 정보를 빼돌리게 하는 방법이다.

3) 무단침입

서류나 시청각자료를 절취·복사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상대기업의 중요시설이나 생산 공정에 무단 침입하는 방법이다.

4) 전통적인 절도

가장 기본·정통적인 방법으로서 필요한 서류나 물건 등을 직접 절취하는 방법이다.

5) 위장침투

전문 산업스파이가 상대기업에 임시 또는 장기적으로 침투하여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상대기업의 핵심기술을 노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6) 컴퓨터 접속 또는 해킹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해킹하여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특히 현대의 인터넷 발달은 해킹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7) 인터넷 활용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상품의 출시일, 인수합병 소식 등을 알 수 있으나 더욱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한다.

8) 방문

경쟁기업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보고, 만지고, 샘플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예로 항공사의 항공기 제조시설을 탐방할 때 접착력이 있는 신발을 신고 공장 바닥에 있는 물질을 수집하여 부품의 재질을 파악하기도 한다.

9) 전송자료 가로채기

암호화하지 않은 정보를 전화, 팩스, 컴퓨터, 위성 등을 통하여 전송할 때 고도의 컴퓨터기술을 이용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이다.

10) 정보브로커

정보브로커들은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1) 휴대전화 도·감청

이동통신, PDA와 같은 개인통신 장비에 대한 도·감청 행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12) 자료의 촬영·녹음·도청

전문화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핸드폰, 시계, 볼펜, 담배, 라이터, 책, 안경테 등으로 위장한 소형 장비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13) 항공촬영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경쟁사의 공장이나 시설을 촬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14) 평가 및 상품분석

특정 기술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임시로 만들어 표적 회사의 제조 기술을 위장 구매하여 상품 샘플, 설계명세서, 제조장비, 핵심 직원의 이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15) 위장합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대상 업체와 위장 인수·합병하여 기술과 정보만 빼돌린 후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다.

권태중(2008)은 산업기술유출 유형을 크게 유출주체, 유출매체, 유출기술에 따라 분류하였다. 유출주체는 퇴직자, 내부인력, 합작투자자, 외국고용인력, 수출바이어, 산업스파이, 협력·하청·용역업체, 컨설팅기관 등으로 분류하였고 유출매체는 외장형 메모리, e메일, 인터넷 및 해킹, 폐기물 또는 샘플, 기술인력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유출기술은 상표, 의장, 핵심기술, 경영노하우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내부자에 의한 유출’ 2가지 주체별로 나누었다.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경쟁업체를 포함해 협력·하청업체의 직원 등 외부인원에 의해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경쟁업체가 피해기업에 자주 출입하는 협력업체를 매수하여 기술정보를 빼돌리도록 하거나 기술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취업하기도 한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경쟁업체가 피해기업의 내부직원을 매수·포섭하여 기술정보를 빼돌리도록 하는 ‘외부자의 매수’와 회사에 불만을 품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내부자 자의’가 있다.

(1) 외부자에 의한 유출

경쟁업체직원이 직접 무단침입하여 기술정보를 훔치거나, 위장취업자,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접근하여 기밀을 절도, 절취, 도촬 등으로 훔치는 행위.

(2) 내부자에 의한 유출

고액의 사례금이나, 스카우트제의를 하는 등으로 내부직원을 매수하여 기술이나 기밀을 건네받는 행위나 내부직원의 사욕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기밀을 직접 반출하여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사에 협조하는 행위 또는 밀거래를 통해 이득을 갖는 행위.

III.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산업기술 유출 등 산업범죄는 주로 조직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기술유출이 많고, 산업기술 유출 분야도 과거 전자·정보통신분야에서 방위산업, 전략물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지능화·첨단화로 범죄인지사실이 어렵고, IT기술 발달에 따라 대량화·신속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국가핵심기술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유출시 연관산업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⁴⁾

국가정보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무려 37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해 약 60조원의 손실로 가안할 때 최근 10년간 국가적으로 60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⁵⁾

기업 관리자들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력이 큰 위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NIMTOF(not in my term of office) 마인드로 경영에 임하고 있어 실제 위험 발생 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

4)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http://service12.nis.go.kr/servlet/page?cmd=preservation&cd_code=outflow_1&menu=AA00, 2017년 10월 8일 검색).

5) 미국의 경우 GDP의 5%를 산업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추정하며, 우리나라 2013년 GDP 1조 2천억 달러의 5% 적용시 한해 600억 달러(약 60조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이는 2013년 국방예산 약 35조 보다 많은 액수이다(한국산업보안 연구학회 「산업보안학회집」)

하면서, 기업들은 초기위험 파악부터 평가, 대응전략 구상 및 실행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축하고 주요 위험관리 방안은 ① 위험축소 사전조치(방재시설), ② 책임체제 구축(직원 인센티브), ③ 공급 체인 분산, ④ 저수익/고위험 사업 회피, ⑤ 위험 이전(보험 분산), ⑥ 위험 보전(충당금), ⑦ 조기경보시스템(사전 위험감지팀 운영), ⑧ 시뮬레이션 실시, ⑨ 백업 시설 구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다(이성우 201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증가, 기술유출 수법의 첨단화 및 지능화, 범죄자의 주체적 문제 등 이상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 기술유출 수법의 첨단화 및 지능화

과거의 무단침입, 기술자 매수 등의 투박한 기술유출 수법이 현재에 이르러 대용량 저장매체 활용,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 현대의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유출의 수법 또한 첨단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김홍빈, 2014).

기술유출 수법의 첨단화와 지능화의 실태를 사례로 살펴해보겠다.

2012년 디스플레이기술 유출사건은 지능화된 장비를 이용한 기술유출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계 기업인 디스플레이패널 검사장비 업체 O사의 L부장 등 6명이 디스플레이업체 A사와 B사에 납품한 장비의 운용과 기술지원 등으로 파견근무 하면서 자체 제작한 신용카드형 USB메모리와 신발과 벨트 등에 은닉해 반입한 USB를 사용해 극비자료와 몰래 촬영한 국가핵심기술을 저장, 유출하였다.⁶⁾

2010년 반도체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국내 반도체회사 A사의 협력업체 B사는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면서 A/S 등을 빙자하거나 내부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수법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 된 사례이다.⁷⁾ 이는 친분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한 기술유출시도이다.

2008년 태양광 차단 신소재기술 유출기도 사건은 M사의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성모씨가 자신의 지인을 M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시켜 핵심기술과 영업비

6) 산업기밀보호센터(2012). 기술유출사례.

7) 산업기밀보호센터(2010). 기술유출사례.

밀 자료를 빼들려 해외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⁸⁾로 반도체기술 유출사건과 마찬가지로 우호적 관계를 이용한 위장취업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한 사례이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신용카드형 USB와 같이 지능화된 장비와 수법이 동원되고, 친분을 이용하거나 우호적관계로 접근하여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인터넷의 사용과 IT기술의 발전이 산업기술유출 기회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보안의 글로벌 트렌드는 물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의 융합(convergence)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이다.

사업장에 수없이 설치된 CCTV와 엄격한 출입통제시스템 그리고 보안서약서가 가시적인 보안수준을 제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된 출입자(종업원)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임직원 모두에게 기업의 보안정책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사소한 보안활동이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주어서 조직원 전체가 보안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번잡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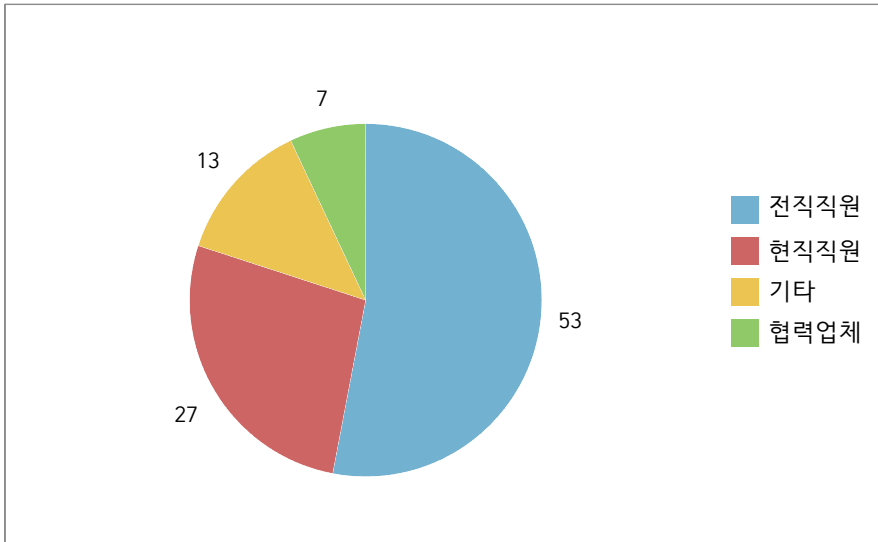
미국 정부 및 기업의 보안 전문가들도 기술유출의 약 75%가 스파이 활동 등과 같은 인적 정보원에 의한 것이고, IT를 활용한 유출은 6%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IT보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04년에 미국 기업은 IT보안에 4,440억 달러를 소비했으며, 79%의 기업이 2005년에도 동일 혹은 증가한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되었다(Cavanagh, 2004: 28).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첨단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갖춘다고 해서 기술유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넌센스다. 오히려 이러한 첨단시스템은 인간관계를 가장한 사회공학적 기법에 의해 손쉽게 무력화된다.

8) 산업기밀보호센터(2008). 기술유출사례.

2.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 문제

<그림 1-1> 기술유출범죄자의 유형 비율



※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2017년 10월 15일 검색).

1993년 삼성전자 직원이 경쟁사의 공장에 무단 잠입해 기술정보를 훔치려 했던 사건(연합뉴스, 2015)처럼 과거에는 경쟁사의 직원이나 첩자가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무단침입으로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접근의 어려움과 발각 시 얻게 될 손해 등으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해당 기업의 내부직원을 매수하여 시도하는 등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범죄가 증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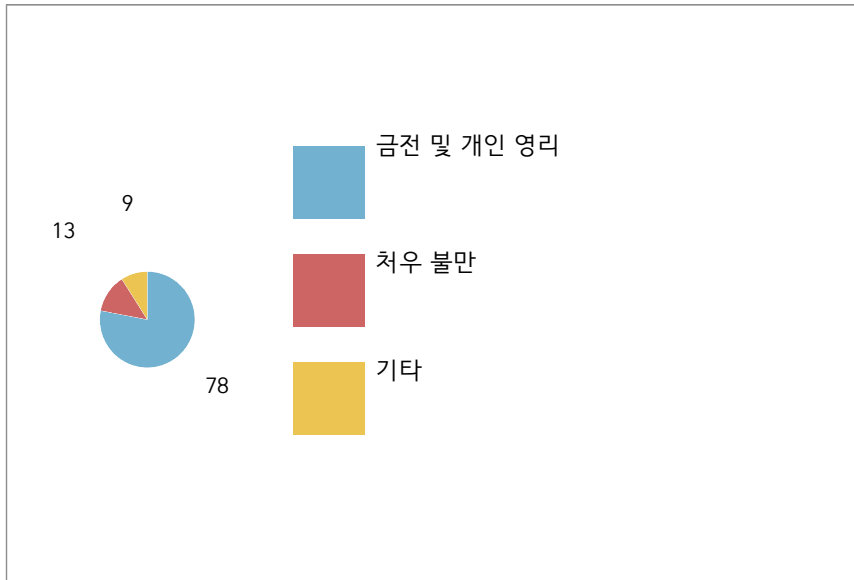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산업기술유출범죄자의 유형으로 전·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등이 있으며 유출범죄의 52.8%가 전직직원이었고 27.1%가 현직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범죄의 약 80%에 해당되는 비율로 기술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범죄가 대부분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만 예방할 수 있어도 많은 부분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 또한 내부직원의 관리이다.

아래 <그림 1-2>에서 내부직원의 기술유출범죄의 동기를 보면 금전 및 개인 영리가 78%, 처우불만이 13%로 나타났는데, 처우불만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인사상의 대우를 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적 이익에 대한 사욕으로 일어나는 유출범죄는 직원 개인 인성상의 도덕성 문제로 관리가 애매한 부분이다.

<그림 1-2> 유출범죄 동기 비율



※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2017년 10월 15일 검색).

내부직원의 도덕성 문제는 기술정보 보안의 주체이자 객체가 곧 기술정보를 소지하고 취급하는 내부직원이라는 사실에서 보안활동상의 까다로운 과제로 남는다(연희모, 2013). 특히 직원들은 언젠가 노년기로 접어들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심리로 이어져 물질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되므로 금전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가져다준다(연희모, 2013).

2011년 이태규의 연구에 따르면 민병설의 인원보안의 한계로 사람이 관리주체와

객체인 점, 사람의 내면성 접근의 한계와 환경에 따른 변화, 보안관리에 대한 인간의 저항성, 제도권을 벗어난 인원에 대한 한계 등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심리파악이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더욱이 보안요원이 내부직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감시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저항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원의 신분으로 내부직원에 대해 일종의 수사작업을 벌인다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3. 산업기술유출범죄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범죄자 주체를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내부자에 의한 유출' 2가지로 나누었다.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경쟁사의 직원이 해당기업에 무단침입 하거나 혹은 위장취업,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등으로 기술정보에 접근하여 훔쳐가는 '잠입 및 절도·수집' 형태가 있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2가지로 나뉘지는데 이를 '외부자의 매수'와 '내부자 자의'로 하겠다. 외부자의 매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쟁업체가 고액의 사례금이나, 현재보다 훨씬 좋은 대우의 스카우트제의를 하는 등으로 해당업체 직원을 매수하여 기술이나 기밀을 건네받는 행위이고, 내부자 자의는 내부직원의 사욕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기술정보를 직접 반출하여 따로 회사를 차리는 행위 또는 경쟁사에 취직하거나 기술정보를 팔아넘겨 이득을 갖는 행위이다.

이하의 사례들은 기술유출사건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정리한 것으로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뉴스기사를 선별하여 적절한 사례를 위주로 인용·정리하였다.

1) 외부자에 의한 유출

(1) 잠입 및 절도·수집

<사례1> 1993년 삼성전자 수원공장 직원 2명이 금성사 창원공장에 잠입해 김장독 냉장고 관련 기술을 도용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연합뉴스, 2016)

<사례2> 2010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납품업체인 AMK에 반

도체 기계를 써주는 대가로 삼성의 정보를 빼내올 것을 요구해 국가핵심기술 40건을 포함, 반도체 핵심기술 95건을 훔친 것이 드러났다. AMK는 삼성과의 미팅 때 자료를 몰래 가져나오거나 친분을 이용해서 정보를 모으는 방법 등으로 기술을 빼돌렸다(YTN, 2016).

<사례3> 2012년 삼성과 LG의 국가핵심 산업기술로 지정된 디스플레이기술 유기 발광다이오드의 핵심 도면이 이스라엘의 장비 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이스라엘 오보텍의 한국지사 김모씨 등 3명은 수차례에 걸쳐 생산현장에서 검사 장비를 점검하면서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들을 촬영하고 이를 카드형 USB에 저장해 신발, 지갑, 벨트 등에 숨겨 빼돌렸고, 이를 오보텍 본사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해외 경쟁업체 담당지사에 유출했다(이데일리, 한국경제, NEWSIS, 2016).

<사례4> 2011년 전남 장성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인 부인 대신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전기 난방기업체 I사에 공직을 그만두었다고 속이고 이중 취업해 4개월 동안 일한 후 유사업체를 창업하고 전라남도화 4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까지 체결한 것이 드러나 I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NEWSIS, 뉴스웨이, 2016).

<사례1>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무단 침입하여 기밀을 직접 훔치는 유형이다. 협력업체와 공모하거나 위장취업 등의 우회적 수법이 아닌 기밀에 직접 접근한 가장 단순한 수법인 만큼 발각위험이 크며, 발각되었을 때 책임회피에도 불리하다. 이러한 리스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타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회사의 경영상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사례2>의 삼성과 AMK의 관계에서 삼성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AMK에 하청함으로써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과 AMK는 20여 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내부 직원들의 친밀도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AMK는 2005년부터 약 6년 동안 삼성의 기술정보를

유출해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삼성과 AMK가 20여 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형성된 친밀관계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삼성의 주력제품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인 만큼 AMK 직원들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은밀한 곳까지 아무 의심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에 관한 경계가 완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유출범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기술을 빼돌렸으며, 이후 AMK의 미국지사 모기업인 AMAT(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와 화해하기 위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은 무마되었다(NEWSIS, 2016).

<사례3> 또한 피해기업의 생산공정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특성을 이용하여 기술정보를 유출한 사례이다. IT기술의 발달로 동전만한 크기의 소형 저장매체에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저장 및 취급이 더욱 빠르고 간편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 또한 손 쉬워졌는데 <사례3>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한 카드형 또는 벨트와 신발에 숨길 만큼 작은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기밀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 또한 유출범들은 공장 가동상태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익힌 후 행동에 들어갔으며, 카드형 USB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례2>와 <사례3>은 협력업체 직원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한 '외부자에 의한 유출'로서 괄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며, 이를 통해 경쟁업체 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우호적 관계의 업체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4>의 위장취업의 경우 기술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기업에 취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인데 이러한 방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출범이 피해기업의 일원이라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사례4>는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신뢰를 얻었는데, I사가 A의 공직을 그만두었다는 말에 속아 별다른 조사 없이 채용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뢰와 친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장취업한 유출범을 기업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취약점을 제공하였다.

2) 내부자에 의한 유출

(1) 외부자의 매수

<사례5> 2004년 반도체회사인 S사의 개발팀원 방모씨 등 6명이 경쟁사인 L사의 간부로부터 연봉인상과 직급상승, 회사주식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S사가 10여년 동안 364억 원을 들여 개발한 광반도체 생산기술을 넘겨주다 적발되었다(SBS, 디지털

타임스 2016).

<사례6> 2011년 국내 유명 오토바이 생산업체 A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4명에 의해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이모씨는 A사의 사업부진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퇴사하여 다른 회사를 차리고, 피해회사 부서 곳곳에 있는 직원들을 포섭해 정보를 빼내어 중국의 경쟁사로 건네 31억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NEWSIS, YTN 2016).

<사례5>는 일반적인 매수의 형태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기업의 직원을 매수해 기술정보를 건네받는 수법이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에서 유출범은 대개 허영심과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여자관계, 회사에 대한 불만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기술을 입수하려는 경쟁사의 매수목표로 선정되는 내부직원이 이에 해당된다(연희모, 2013).

<사례6>은 피해기업의 직원을 매수한 외부자가 전직직원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부자는 내부직원을 매수 할 때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친밀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이 사례에서 외부자는 매수한 직원의 몇몇은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키고 몇몇은 피해회사에 남겨두는 등 정보수집에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매수된 내부자의 외부자에 대한 협조가 상당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내부자 자의

<사례7> 2006년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 박모씨와 배모씨, 현직 연구원 A씨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씨는 배씨와 공모하여 영업기밀 9건을 유출한데 이어 현직 연구원 A씨로부터 같은 기밀 1건을 넘겨받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였다. 박씨는 또한 유출한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 했는데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미끼로 스카우트제의하고 기밀을 빼내올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쿠키뉴스, 2016).

<사례8> 2007년 회사측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가정용 가라오케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D사 연구소장 K씨 등 2명이 구속되었다. K씨 등은 D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동반퇴사한 뒤 핵심기술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 D사 연구소에 저장된 기술자료를 모두 파손하여 D사는 도산하였다(쿠키뉴스, 2016).

<사례7>은 <사례6>과 같이 회사동료가 유출범죄에 관련되어있다. <사례6>과 다른 점은 외부자가 아닌 유출범죄를 기도하는 내부직원이 다른 회사를 차리기 위해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또 다른 동료를 매수한 점이다. 역시 친밀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례는 한명의 기술유출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례8>은 회사의 인사처우에 불만을 품은 복수심이 범행의 동기가 된 사례이다. 김평식(2015)의 연구에서 언급된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이 수행한 업무헌신에 비하여 회사의 보상이나 대우가 적으면 직원은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고 일을 덜하거나 절도를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고 하였다. 고용주의 부적절한 대우는 직원의 절도, 횡령, 생산성 방해 등으로 표출된다. <사례8>은 내부직원에게 대한 불공정대우가 기업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의 미흡

최근의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인 대학을 이수하고 취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속칭 썩어루족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화되었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나 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역시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 변화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수요원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단지 교육기관만 설립되어 운영한다고 하여 해결되지는 않는다(최선태, 2005).

21세기 보안의 글로벌 트렌드는 정보보호와 물리적 보안의 통합과 비즈니스와의

체계적인 연계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시적 교육으로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조직화되는 보안리스크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대사회의 보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융합학문 분야가 보안 분야이다. 따라서 첨단화되는 보안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기업보안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의 미시적 사고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의 본래의 의미인 불안전성의 극복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계속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할 전문가의 능력에 좌우된다.

세계화시대의 조직자산의 효과적인 보호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해당 조직의 자산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별적인 조직에게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핵심에는 보안전문가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에 진출한 다국적(혹은 무국적)기업자산을 특정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분구조와 경영권의 다각화에 따라 기업의 소속 국가의 개념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장에 적합한 보안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이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유지의 핵심이다(최선태, 유형창, 2010).

일찍이 세계를 상대로 기업경영을 한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자산보호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오래전부터 산업보안 분야를 주요한 매니지먼트 분야로 다루며 CSO를 축으로 한 통합화된 보안조직과 시스템화 된 운영을 토대로 기업자산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보안조직의 전문화와 보안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여 왔다(이성우, 2014).

이에 반하여 최근 빈발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가의 대응책조차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기술유출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식도 실제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보안사건을 다루는 매스컴의 보도태도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산업스파이 사건의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나, 보도기관들은 실제적인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피해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액의 산정은 대부분의 유출된 해당기술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시장에서 최대 수익을 올렸을 때를 가정한 경우이므로 실제적인 피해액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도 대부분 지나치게 기술적인 대책에 의존하는 태도와 경영자의 의식의 문제점 그리고 법과 제도의 미흡을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모든 기술유

출 사건에 따라오는 만능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보안전문가의 부재가 이러한 문제점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또는 기업의 보안리스크와 관련된 사건이나 구제역·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창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의 심각성 등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업보안전문가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듯 복잡다기한 문제점을 산업 혹은 기업전반의 문제점으로 조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안교육기관도 거의 전무하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성우, 2014).

산업보안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보안전문가 교육과정은 산업보안 정책과 교육제도를 포함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과 보안전문가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최선태, 2007).

일반적으로 산업보안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보안교육 분야는 학부과정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 속하나 대학원과정에서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며, 범죄예방, 정보보안, 에너지보안, 보안교육프로그램, 위기와 재난관리, 대테러리즘, 금융사기와 지능범죄 예방, 지적재산 보호, 보안건축, 금지약물, 사건조사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국가나 산업자산에 대한 불안정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찾아내어 미래의 손실원인을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보안 분야와의 연관성은 정보보호, 경찰행정, 경영정보, 소방과 경호, 산업안전 관련학과가 이와 유사한 정도로써 각각이 개별분야에 한정된 편향적이며 국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결코 산업전반의 리스크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조직의 안정성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

경영자가 다양한 기업의 보안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보안활동에 대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에 얼마만큼의 위협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화된 데이터를 제시하여야만 경영자부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문적인 보안진단을 바탕으로 한 기업체의 위험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내부인에 의한 임기응변식의 비전문적인 대응책은 결코 자기 조직의 취약점과 외부 위협요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보안진단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기술적인 대응과 물리적인 대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기밀유출과 같은 보안리스크도 기술적인 부분과 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통합된 상태에서 해당 조직에 적합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보안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환경과 조직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계속적인 합리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바로 잡는 관리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글로벌화의 복잡성은 현재에는 가시적인 리스크와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에 잠재된 위험요소의 발생개연성을 분석하여 미래의 손실에 대비한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안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더불어 오늘날 보안선진국에서는 보안의 목표를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의 통합을 의미하는 온오프라인의 컨버전스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몰두하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나라 보안교육의 대부분은 온라인에 치우쳐 있으며, 이러한 교육도 실제적으로는 기능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보안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온라인 위주의 보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과의 조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경영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경쟁사의 보안 역량이 강화되면 적극적 보안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사의 취약성은 커지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은 증가하므로 산업보안업무의 전문화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보안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볼 때 이미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동안의 소극적·방어적인 보안기능에서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경쟁사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적극적·공격적인 산업정보전의 개념으로 보안업무가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정보전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의 보안활동이 필요하며 시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의 원인이 경쟁사의 어떤 의도된 기획에 따라 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숨겨진 전략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IV.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대응방안

1. 인적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기술유출범죄에서 경계효과를 반감시키는 친밀관계나 우호적관계가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서 친밀관계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야기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취약점을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안요원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고, 생산 공정 등의 은밀한 장소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요원이 동행하거나 출입통제·관리에 철저했다라면 일련의 기밀유출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보안요원들의 보안업무를 강화시킨다면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은 보안요원들의 경비업무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협력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직원에게도 포함되는 현상이다. 시설경비에 있어 출입통제업무는 많은 에러 사항을 가져다주는데 그중 하나가 오래,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인원 관리이다. 경비원에게 있어 이러한 인원만큼 경계하기 어려운 부류가 없을 것이다. 자주 마주치는 인원인 만큼 그들은 경비원들의 경계업무가 더욱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에 따라 불편한 보안절차나 관리를 생략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비원 역시 인격인 만큼 자주 마주치는 인원과 친밀도가 형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비원 자신이 경계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인원이 기업내부직원이나 협력업체직원을 가장한 산업기술유출범이라면 보안요원의 임무는 실패로 이어져 해당 기업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

인적관리에서 인간관계만큼 까다로운 부분이 없으며 더욱이 보안요원 또한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부직원이나 협력관계기업의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무적 태도와 경계, 감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보안요원 또한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에러사항을 완화하고 보다 원활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요원의 보안업무 보호’와 ‘인사관리에서 보안요원의 지위 보증’이 필요하다.

경호원의 자질 중에 ‘품위유지’가 있다. 경호원이 품위를 유지하면 곧 경호대상자의 품위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 반대로 경호원의 품위가 낮으면 경호대상자

의 품위도 같이 떨어진다. 이것은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얼굴이다’는 말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경호원은 품위유지 이외에도 인성과 예절 등의 자질도 요구받는다.

이것은 기업의 보안요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업의 보안수준과 보안요원들의 보안역량이 곧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업무를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신성한 업무로 취급해야 한다. 이는 보안요원의 지위상승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업 내의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지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보안조직으로서 독립된 체계를 이루어 기업내부직원에게 대한 보안절차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업무특성상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내부직원과의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회사 내의 보안활동과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내부직원과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만약 보안요원들이 독립적으로 직위를 남용하게 되면 조직간의 갈등과 회사 내의 치명적인 경영의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보안요원들의 자질과 인성·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인적 보안관리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바로 “보안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책임이며, 또한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것(Security is everybody's responsibility, and is a business issue)”이라는 공통적 인식과 내부 문화의 형성이다. 보안관리자는 보안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안의식을 생활화하도록 계몽하고 교육·훈련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진은 보안 관련 정책을 명확히 선언하고 보안 관련 책임자나 유관부서에 보안을 저해하는 내부의 요소들에 대한 제재나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거나 또는 연관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2).

2.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체제 강화

전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보안인식재고 등 회사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 바 ‘함께하는 보안’ 의식으로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안요원의 번거로울 수 있는 보안절차나 업무를

중요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자주 출입하는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출입의 동행이나 필요시 이행되는 소지품검사 등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절차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절차임을 헤아리도록 하여 보안요원의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

현대에 들어 기업의 건물이나 시설, 기밀 등의 보안에 있어서 CCTV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보안요소가 되었다. 보안요원의 보안업무에도 당연히 CCTV가 활용되는데 주로 범죄의 예방 및 감시의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중 보안은 CCTV가 보안요원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출입통제의 외부인사 및 내부직원들의 엄격한 통합적 물리적 보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최근 검증된 생체인식을 통한 최첨단화된 출입통제 장비를 구축하고 CCTV를 사각지대가 없는 기자제로 엄격히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안업무와 보안요원에 대한 기업내부직원과 인식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분명 보안조직의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절차 생략의 경우 분명 보안요원의 업무태만에 해당되며 이를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따라서 CCTV를 범죄의 감시뿐만 아니라 보안요원의 업무행태를 감시하는 2중 보안에 활용해야 한다.

3. 공공기관과 민간경비 협조체제 구축

첨단산업의 발달로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유출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할 공권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 민간조직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경비의 법적 권한은 한정되어있어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밀유출의 정황을 발견했을 시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민간경비원의 법적 권한으로 민간경비의 힘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민간경비원의 보안업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내의 민·관공동 대응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공공기관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기술유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들을 추진하여도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한계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산업기술 유출 사고 및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기관(행정/수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매뉴얼에 따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유출 시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건 및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적인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노호래, 2008; 이정덕, 2009; 남재성, 2012). 그러나 민간협의체를 통해 산업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정책이나 보완사항들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이를 정책반영에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산업보안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인력양성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은 공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보안관리사는 기업의 산업기술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산업보안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 자격증(국가자격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⁹⁾ 이를 위해서는 산업보안관리사의 자격제도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및 사전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업무

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보안지도사를 신설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신청, 수출 신고, 사전검토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보안 국가자격증은 기존의 산업보안관리사보다 더 광범위한 산업기술유출 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 전문영역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안관련 인력 수요가 늘어남을 감안한다면, 산업보안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해당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보안 교육 담당자에게는 책임 인증제를 부여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민병설, 2005).

이와 더불어 산업보안 교육내용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산업보안관련 교육콘텐츠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1) 산업기술보호교육의 현황에 따르면 산업보안 교육에 있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쉽게 구성된 교육콘텐츠'라는 것에 비춰보면, 기업직원들이 쉽게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산업보안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특성화된 대학이나 전문학과가 개설·운영되어야 한다(이창무, 2009). 산업보안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여 산업정보보안, 산업기밀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보안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에서 제안한 정책처럼, 고등학교 → 대학교 → 특수전문 보안학교 → 보안스페셜리스트 관리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산업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박준석, 2014).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민배 (2011). 산업기술보호법. 인천: 아트팩.
- 김윤배, 김선령 (2007). 글로벌시대의 정보전쟁과 지식자산. 서울: 집문당.
- 박준석 (2014). 산업보안·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창무, 김민지 (2013). 산업보안 이론. 경기: 법문사.
- 최선태 (2009). 21세기 산업보안론. 서울: 진영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2). 산업보안학. 서울: 박영사.
- 권태종 (2008). 산업기술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평식 (2015). 직원 절도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홍빈 (2014). 민간보안업체의 산업기술 보호실태 및 발전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재성 (2012).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 노호래 (2008).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0호.
- 민병설 (2002). 산업보안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목 (2012). 한국 민간경비업무 영역 확대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미 (2015). 기업위기 커뮤니케이션 보도 행태에 관한 연구 : 대한항공 회항사건 사과메시지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희모 (2013).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방지 방안.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완 (2012).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우 (2015). 기업보안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정립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일 (2012).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덕 (2009). 산업스파이범죄에 대응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연구.
- 이정민 (2013).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설계 방안 : 제조사 협력업체 보안관리체계 개선 사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무 (2009). 시큐리티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고찰 :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1집.
- 정성배 (2015). 산업보안 관리활동이 기업의 보안성과와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순 (2014).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소고 제 9회 상반기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세미나.
- 최낙영 (2008).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제 및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태 (2005). 기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선태, 유형창(2010). 한국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5호.
- 최진혁 (2010).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CPED기법의 유용성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4). 2014년도 제9회 상반기 학술세미나 학회집.

2. 기타자료

- 뉴스웨이 (2011, 11, 29). 현직 공무원이 위장취업 후 회사기술 유출?.
- 디지털타임스 (2004, 9, 6). LED기술 빼낸 직원 무더기 적발.
- 법제처 (<http://www.law.go.kr>, 2017년 9월 25일 검색).
- 산업기술보호협회 (<http://www.kaits.or.kr>, 2017년 10월 15일 검색).
- 산업기밀보호센터 (http://www.nis.go.kr/AF/1_5_1_1.do, 2017년 10월 15일 검색).
- 세계일보 (2006, 1, 16). 삼성전자 IT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일당 적발.
- 연합뉴스 (1993, 8, 3). 산업스파이 잇따르자 기업들 자구책 강구.
- 이데일리 (2012, 6, 27). 삼성·LG 차세대 디스플레이 설계도 해외 유출.
- 쿠기뉴스 (2006, 1, 17). 휴대전화 액정화면(TFT-LCD) 기술 中 유출 시도한 전·현 연구원 영장.
- 쿠기뉴스 (2007, 7, 9). 가라오케 기술 中유출 전 연구소장 등 4명 검거.
- 한국경제 (2012, 6, 27). 90조원대 아몰레드기술 해외 유출... 삼성·LG 충격.
- NEWSIS (2010.11.30.). 삼성전자, 美 AMAT와 기술유출 민사상 합의.
- NEWSIS (2011.06.07.). 국내 유명 오토바이사 제조기술 중국에 유출.
- NEWSIS (2011.11.28.). 현직 공무원, 이중 취업-기밀 유출 의혹.
- NEWSIS (2012.06.27.). 고양이에 생선 맡긴 삼성·LG 핵심기술 뺑 뚝렸다.
- SBS (2004.09.06.). 첨단산업 기술 유출 적발.

YIN (2010.02.03.).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기술 훔쳐.

YIN (2011.06.07.). 회사정보 통째로... 전 대표이사가 주도.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 and its response plan

Park, Chan Soo*·Kwon, Hyuck Bin**

Unlike the industrialized society, where materials were valued in the past, modern society is promoting national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invisible information is of great economic value. In particular, as only one superior technology can make great economic breakthroughs,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at leaking industrial technologies not only to the company but also to gain the upper hand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offences and in seeking ways to prevent them. In the case analysis, the theft and collection were divided into ‘leakage by external party’ and ‘leakage by internal company’ made by the company’s insider. Based on the analysis, it concluded that due to the security vulnerability caused by the close relationship, the government should gain power in improving personnel management and security affairs at the expense of the private sector.

Firs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search for improvements to the vulnerabilities of different types of human security.

Seco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ecurity work for access control must be strengthened.

*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Master (The 1st Author)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Trustee of director
(The Corresponding Author)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stablish a public organization (NIS, police, industry and industry, and prosecution) and a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Fourth, the university should systematically establish related departments, majors and starch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troduce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nurture professional workforce.

Key Words: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Leak, Private Security, Personal Security, Professional Personnel

부 록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119
- 논문집필요령 126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40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146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164
- 논문투고 일정 165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0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평가기준	등급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점수	0 ~ 4	5 ~ 8	9 ~ 12	13~16	17~20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100]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확정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불가 (0 ~ 70)
해당란에 0표시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절 차	처리기간	누적처리기간
원고심사배정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 사 의 회	송부기간 5일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심 사	심사기간 2주일	
↓		
심사결과접수	회송기간 5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게재여부결정	3일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1차수정지시	7일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7일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2차수정지시	3일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3일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I.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 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 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 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

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게),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야마 타다시(守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년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I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쉼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
 ‘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III.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섬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쉼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쉼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자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

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⑥ 역서와 편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광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자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 역(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쉼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뺀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V.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

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

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 수정 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

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

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는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으로 한 여려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에 조사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에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순서	전반기	후반기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4월 30일 / 6월 30일	10월 31일 / 12월 31일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
합)
-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
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치영(010-9263-2702/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강 옥
(경찰대)

편집위원	권혁빈 (용인대)	김도우 (경남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김태훈 (성신여대)
	윤민우 (가천대)	이창배 (울산대)	장항배 (중앙대)	최 관 (한세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5호

인쇄일 2017년 12월 28일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인 박준석
 편집인 강 옥
 발행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로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 koreasoulist@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인쇄처 백산출판사
 전 화 (02) 914-1621(代)
 F A X (031) 955-9911
edit@ibaeksan.kr www.ibaeksan.kr

